

碩士學位論文

오키나와 현대사

「沖繩現代史」의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日科

金敬娥

2008年 2月

오키나와 현대사

「沖繩現代史」의 翻譯論文

指導教授 李 禮 安

金 敬 娥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金敬娥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8年 2月

목 차

역사 후기	1
서문	3

제1장 미군 지배 하의 오키나와 5

주민까지 휘말린 오키나와전투	5
평화헌법과 미군의 오키나와 지배	6
대일 평화조약과 일본 복귀 운동	8
미 군정 하의 오키나와	9
폭력적인 토지 접수	12
섬 전체 투쟁의 폭발	13
스나가와(砂川)와 오키나와의 차이	15
안보 개정과 오키나와로의 부담 편중	16
베트남전쟁과 오키나와	18
‘반전(反戰)복귀’로의 전환	19
부각되는 오키나와 반환	20
B52 철거 투쟁	21
오키나와 반환은 무엇이었나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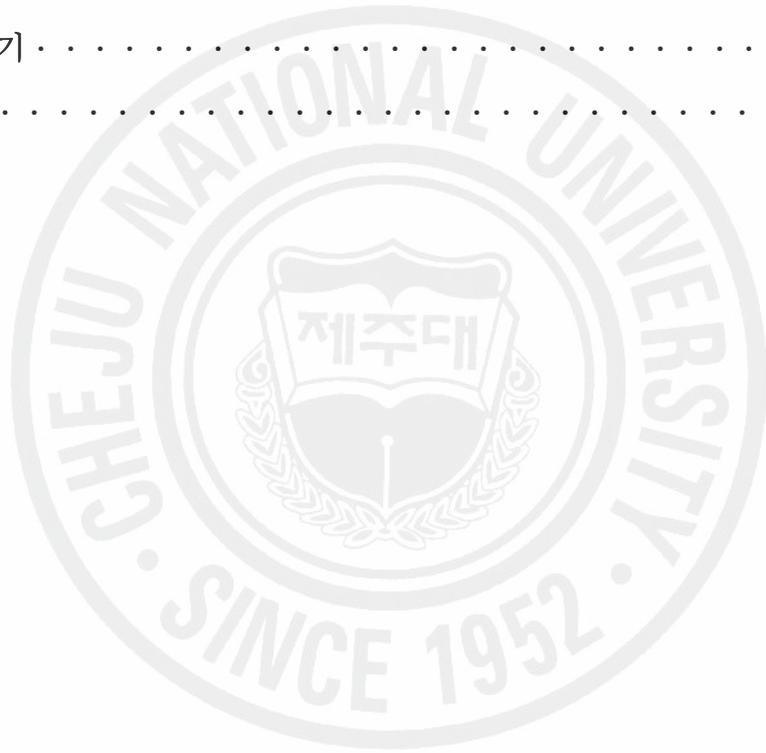
제2장 일본이 된 오키나와 25

쑥쑥한 복귀	25
반환으로 오키나와에 집중된 미군기지	26
미군 우선을 인정한 ‘5·15 합의 메모’	28
혼란을 야기한 일본 정부의 군용지 정책	30
반전지주(反戰地主)와 공용지법	31
자위대 배치에 대한 저항	33
시기에 따른 ‘히노마루’의 의미변화	34

‘혁신 왕국’	35
1차 진흥 계획과 오키나와 해양 박람회	36
새로운 가치관을 제기한 ‘긴(金武)만을 지키는 모임’	38
복귀에 실망한 민중	39
지적 명확화를 둘러싼 공방	40
안보에 구멍이 뚫린 4일	41
‘안보 보류론’	43
야라 현정에서 다이라 현정으로	45
‘가이드라인’과 ‘배려 예산’	46
‘사람은 오른쪽, 차는 왼쪽’	47
정당, 노조, 운동의 ‘일체화’	48
‘전군노(全軍勞)’의 이름이 사라지다	49
제3장 불태워진 ‘히노마루’	52
훈련 격화와 가데나(嘉手納) 폭음소송	52
부활한 미 군용지특조법	52
강제 사용 절차의 5단계	53
‘5년간의 강제 사용’이라는 재결	54
1평 반전지주 운동의 발족	55
변화하는 자위대관	57
6세 미만의 ‘전투협력자’란	59
‘복귀해서 다행’이었나	60
반(反)복귀·반(反)야마토	61
국제적 군사화의 조류 속에서	63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과 해방국체(海邦國體)	64
오키나와 민중의 천황관	65
강화된 관리체제	66
오키나와에 대한 천황의 전쟁책임	68

‘히노마루’, ‘기미가요’와 학교 69
 혼란 속의 86년도 졸업식·입학식 71
 2년도 되지 않아 전국 수준으로 72
 요미탄(謏谷)촌에서 불태워진 ‘히노마루’ 73
 ‘강제 사용 20년’ 신청이라는 폭거 74
 경찰까지 개입한 공개심리 75
 가테나(嘉手納) 기지 ‘인간 떠릿기’로 76

저자 후기 78
 도표 80



역자 후기

미국은 세계 곳곳에 자국의 기지를 두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적지 않은 수의 미군기지가 국내에 있다.

이 기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기지를 둬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정책 하에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몇 년, 미국의 세계전략개편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미군기지의 이전과 그 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와 충돌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용산기지의 오산, 평택 이전 결정과 이행 과정이, 일본의 경우는 오키나와 내의 기지 이전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저자인 아라사키 모리테루 씨는 오키나와 근현대사와 사회학을 전공하고, 현재 오키나와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저술 및 기고 등 다양한 논평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의 현대를 조망하면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사 속의 상황을 지금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시기 구분에 따라 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역에서는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기 이전 시기까지인 3장까지 만을 다루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한국의 미군기지와 관련해 오키나와 반환 후 현재까지의 상황은 비교적 알려져 있는 데 비해, 오키나와전투에서 오키나와 반환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특히 오키나와의 주민들에게는 과거의 류큐(琉球) 왕국으로부터 일본에 편입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천황에 대해 충성해야 했다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는 과거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느낀 점도 작용했다.

역사는 언뜻 보면 강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어느 시대에나 폭정과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은 존재했으며, 민중들은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며 그에 걸맞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과 테러와 군대는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강자, 혹은 거대 권력에 의해 부정되기 쉬운 개개인의 가치와, 그 개개인이 바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혹은 적어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지도교수님과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서문

전후 일본 정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되는 형태로, 후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그 세계전략에 대한 종속 또는 적극적 보완이라는 형태가 미-일 안보체제(미-일동맹)로 표현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후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깊이 연계됨으로써 세계의 일원이 되어온 것이다. 그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간 부분으로 여겨져 온 오키나와의 현대사는 미-일동맹의 변질과정에 따라 여섯 시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제1기는 대일 평화조약과 세트를 이루는 구 안보조약의 성립(1952년 4월) 이전 시기, 이른바 전사(前史)의 단계이다.

제2기는 52년 4월의 두 조약성립에서 1960년의 안보 개정까지의 시기이다.

제3기는 60년 안보 개정에서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까지의 시기이다.

제4기는 오키나와 반환에서 1978년의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른바 가이드라인)책정과 ‘배려 예산’의 시작시기까지이다.

제5기는 70년대 말부터 1995년 여름까지의 시기이다.

제6기는 미-일 안보 재정의라는 위로부터의 안보 재정립과, 오키나와가 제기한 아래로부터의 안보 재정립 요구가 격돌하는 1995년 가을 이후이다. 그리고 2005년의 이른바 미군재편협약에 따라 미-일 안보체제는 다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 미-일 동맹의 완성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시기 구분 중 제1기부터 제3기까지의 시기는 오키나와가 미군 지배하에 놓여있었던 시기이며, 제4기 이후의 시기는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해 47도도부현의 하나가 된 시기이다.

오키나와 전후사(현대사)는, 미군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와 일본이 된 이후, 이 두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두 시기를 통틀어 오키나와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근간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연속성을 띠면서 일본 전후사(현대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이 두 시기는 이를 떼면 ‘전후 60년’이라는 말로 한데 묶을 수 없는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오키나와전투에서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에 이르는 미군 지배 시기의 오키나

와의 역사적 행보, 특히 군정과 대치했던 민중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와나미 신서(岩波新書)에서 펴낸 전저 『오키나와 전후사(沖繩戰後史)』(1976년, 나카노 요시오와 공저)에서 구체적으로 저술한 바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제1장에서 미군 지배 시기의 오키나와 전후사를 요약·정리하고, 제2장 이하에서는 일본이 된 이후, 즉 오키나와 반환 이후의 오키나와의 역사적 행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 미군 지배 하의 오키나와

주민까지 휘말린 오키나와전투

잘 알려진 대로 오키나와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내 수십만 명의 민중들의 일상생활 터전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졌던 지역이다. 밀어닥친 미군은 지상 전투 부대만 해도 약 18만 명, 후방지원부대를 더하면 5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비해 일본군은 고작 10만 명. 더구나 그 중 약 3분의 1은 오키나와 현지에서 모집한 보조병력이었다.

1945년 4월 1일, 미군은 요미탄(詭谷)에서 차탄(北谷)에 이르는 서해안에서 오키나와 본섬에 대한 상륙을 개시해 오키나와 본섬을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두 편으로 나뉘어 북상과 남하를 개시했다. 일본군의 주력 부대는 기노완(宜野灣)의 가카즈(嘉数) 고지에서 우라소에(浦添)의 마에다(前田) 고지를 중심으로 한 구릉 지대에 지하 진지망을 포진해 미군을 노리고 있었다. 가카즈 고지에서 슈리(首里)에 이르는 약 10km가 오키나와전투의 주된 전장이었다. 그 곳에서는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져, 미군은 그 10km를 돌파하는 데 약 50일이 걸렸다. 그러나 일본군은 여기에서 약 70%의 병력을 잃고, 5월말에는 슈리성 지하에 구축한 사령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오키나와전투의 승패는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패잔병을 끌어모아 사령부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했다. 그것은, 오키나와전투가 가능한 한 ‘본토 결전’의 시간을 벌어 ‘국체호지¹⁾(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평화 교섭으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사석작전(捨石作戰)’이기 때문이었다.

남부에는 많은 가마(자연동굴)가 있었고, 이미 수많은 주민들이 피난한 상태였다. 그곳에 일본군이 밀려들었다. 피난민 중에는 일본군에 의해 가마 밖으로 쫓겨나거나 저항하다 스파이로 몰려 죽은 사람도 있었다.

오키나와전투에서는 본토 출신 약 6만 5천 명의 부대와, 오키나와에서 징집된

1) 國體護持 : 국체(國體)란,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을 가리키며, 국체호지란 국체를 수호하는 것, 즉 천황제의 존속 및 유지를 말한다.

약 3만 명의 즉제부대, 민간인 약 9만 4천 명이 희생되었다. 그 밖에 한반도에서 군부와 종군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약 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나, 그 수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군인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나 결국 본토결전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히로시마(広島), 나가사키(長崎)의 원폭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항복했다.

평화헌법과 미군의 오키나와 지배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군의 점령 하에 들어간 후에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에 의한 단독 점령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미 군부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전략상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오키나와를 확보해 두겠다는 욕구의 발로였다.

한편, 일본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포츠담선언 수락 시에도 국체수호에 집착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신헌법의 제정)에 관해서도 대일본제국 헌법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약간의 문구 수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후 일본의 재출발에 즈음해 국가의 기본법인 새 헌법에 대한 시안이나 사안이 몇몇 단체, 정당, 개인 등으로부터 발표되고 있었으나, GHQ(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이들 안과 비교했을 때 일본 정부의 개정 요강이 가장 반동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GHQ 스태프에게 일본국 헌법초안의 기초를 지시했다. 그 때 맥아더가 제시한 개헌 3원칙은, 1. 천황이 국가의 정점에 위치할 것, 2. 일체의 군비와 전쟁 포기, 3. 봉건제도의 철폐 등 3가지였다. 맥아더는 이 초안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개정안 작성을 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그 수용에 난색을 표하며 저항했으나 결국에는 그 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GHQ가 이를 일본 국민에게 공포할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던 여러 시안과 사안들도 참고하면서 초안을 정리한 GHQ

는 이 안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GHQ가 연합국 중 주요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면 천황의 지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맥아더와 미국의 지일파들은 천황제가 점령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친미일본의 형성에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의 연합국은 천황제 존속 자체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GHQ 초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주권재민·상징천황제·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초안을 내놓게 되었다.

전쟁포기 규정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던 일본제국주의의 무력화와 동아시아 지배 전략의 파트너로서 친미적인 중국을 상징하고 있었던 전후 초기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천황제의 존속을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불안을 제거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천황제 유지와 일본의 비무장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 일본의 비무장화는 오키나와의 분리 군사지배·미군의 전략 거점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맥아더가 오키나와를 미군이 지배하고 공군이 요새화 하면 비무장국가인 일본이 군사적 진공지대가 되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명확히 드러낸 것은 1947년 6월 말, 도쿄를 방문 중이던 미국인 기자단과의 간담회 때의 일이었다. 이 맥아더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듯 그 해 9월 GHQ에 전해진 것이 이른바 오키나와에 관한 천황 메시지이다. 천황이 측근인 테라사키 히데나리를 통해 GHQ에 '미국이 일본에 주권을 남기고 조차 형식으로 25년 내지 50년, 또는 그 이상 오키나와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이익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오키나와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어하는 미 군부의 방침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추인한 것은 1949년 초의 일이었다. 이미 중국 대륙에서의 내전은 인민해방군의 압도적 우위 하에 전개되고 있었고, 미소 대립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49년 7월 1일에 시작된 1950회계년도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오키나와 기지 건설 예산을 편성했다. 49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즈음해 맥아더는 '일본은 공산주의진출 저지를 위한 보루'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중화인민

공화국의 성립(49년 10월), 한국전쟁의 발발(50년 6월)이라는 세계 정세의 진전 속에서 비무장국가인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전환시키는 정책도 급속히 구체화 되어 갔다.

먼저 그 첫 번째 정책은, 1950년 8월의 경찰예비대령의 공포(즉일시행)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은 일본의 재무장에 부정적이었던 맥아더 등에게도 미국의 전략을 보완하는 현지 지상 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경찰예비대는 2년 후 안보대가 되었고, 다시 2년 후에는 자위대가 되었다.

두 번째 정책은 미군의 항구적인 일본 주둔이었다. 한국전쟁은 일본의 공격 기지, 후방 지원 기지로서의 미 전략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은 ‘한국특수’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일본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미국의 군사적 이익과 미국의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얻어진 일본의 경제적 이익의 상호 이용관계를 바탕으로 미-일동맹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일 평화조약과 일본 복귀 운동

초기의 대일 점령정책 상 오키나와에 대한 군사 분리 지배는 일본의 비무장화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이 시작되고 미군이 일본 전역을 군사 기지화할 수 있게 된 단계에서도 오키나와의 미군 지배는 강화되기만 할 뿐, 해소되지 않았다. 후일 프라이어 권고가 강조하듯이(13~14페이지 참조) 미국의 배타적 지배하에 놓여있던 오키나와의 기지는, 정권 교체가 예상되고 있던 일본이나 그 밖의 아시아 주권국가와의 조약에 근거한 기지에 비해 훨씬 안정성이 높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51년 9월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평화조약(‘일본국과의 평화조약’)과 함께 미-일 안보조약(‘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들 두 조약은 이듬해인 52년 4월 28일, 동시에 발효되었다.

대일 평화조약 제3조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오키나와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은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를, 합중국이 유일한 시정권자가 되는 신탁 통치제도 하에 두도록 하는 UN에 대한 합중국의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한다.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가결될 때까지 합중국은 영수(領水)를 포함하는 이들 제도(諸島)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해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권력 전부 및 일부를 행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한다’

대일 강화로의 흐름이 뚜렷해지자 오키나와에서는 일본 복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아마미(奄美), 오키나와(沖繩), 미야코(宮古), 야에야마(八重山) 등의 섬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유권자들이 서명과 각 의회의 결의 등을 통해 일본이 아마미 제도를 포함하는 류큐 제도를 미군정 하에 넘기고 독립하려는 것에 항의했으며, ‘평화헌법 체제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미-일 양 정부는 류큐 제도의 독립이라는 결정에 관해 류큐 주민 스스로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았다.

미 군정 하의 오키나와

이미 서술한 것처럼 미국은 대일 강화의 구체화에 앞서 오키나와의 배타적 지배와 군사기지화 방침을 확정했으며, 현지 미군도 그를 위한 체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었다. 오키나와 점령과 동시에 설립되었던 미 군정부는 1950년에 미 민정부로 개칭되었으나 군정부와 민정부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초대 민정장관은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였으며, 민정부 장관은 미 류큐군 사령관 비틀러 소령이었다. 후에 미 극동군이 태평양군에 통합되자 미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류큐군 사령관이 고등변무관이 되었다.

당초 미군은 아마미, 오키나와, 미야코, 야에야마 등 4군도에 각각 주민 측 정부로서 군도정부를 설치했으나, 52년 4월에는 이를 해소하고 미 민정부 하에 전 류큐를 통일하는 류큐 정부를 설치했다. 류큐 정부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했으나 그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류큐 정부 행정주석은 미 민정 부장관(후의 고등변무관)에 의해 임명되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미군 측 지시에 따라야만 했다.

류큐 입법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입법 활동은 미군 측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포고와 포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기지 건설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빈발하는 노동쟁의에 대처하기 위해 류큐 입법원은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3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미 민정부의 방해로 통과가 난항을 겪었다. 이것이 겨우 제정되자 미 민정부는 노동3법 공포직전(1953년 8월) 포령 116호 ‘류큐인 피용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노동관계법’을 공포했으며, 기준관련 사업소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에게는 입법원이 제정한 노동법은 적용하지 않고 포령 116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55년 3월, 미 민정부는 포령 145호 ‘노동조합 인가수속’을 공포하고, 모든 노동조합은 미 민정부의 인가 없이는 결성될 수 없도록 하는(62년 폐지) 등 노동운동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전후 일본의 노동조합법이 GHQ의 민주화 지시에 의해 제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후 민주주의’도 일본과 오키나와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사법기관으로는 상소법원, 순회법원, 치안법원 등의 민주법원이 설치되었으나 취급사항은 류큐 주민들 간의 사건에 한정되어 있었다.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은 미 민정부 법원이 취급하게 되어 있었다. 류큐 주민 사이의 사건이라도 법령해석상 미군 지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류큐 정부 법원에서 미 민정부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미군범죄 등은 군법회의에서 처리되었다. 또 외국인 범죄에 관해서는, 류큐 경찰에 대한 현행법 체포 권한은 인정되었으나 체포한 용의자는 즉시 미군 측에 인도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류큐 주민’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었을까.

대일 평화조약 제3조(9페이지 참조)는, 류큐 제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류큐 주민의 국적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으나, 주민은 미군의 엄중한 관리 하에 놓여있었다. 류큐 제도의 출입 지역에 대해서는, 미 민정부가 발행하는 도항 증명서(여권) 발급을 받아야 했다. 미 민정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곧잘 여권 발급을 정지했다. 여권 발급 정지는 미 민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 활동·언론 활동 규제 수단이었다. 도쿄의 대학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귀성했다가 도쿄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퇴학 당할 지경에 이르는 사례조차 있었다. 류큐 주민들은 태어나고 자란 섬에 사는 한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가기만 하면 일본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고 선거권도 주어졌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류큐 주민’은 ‘일본 국민’이었다.

또 류큐의 통화로는 48년부터 58년까지는 B엔이라는 군표가, 58년부터 72년까지는 미국의 달러가 사용되었다.

1953년 8월 일본을 방문한 델러스 미 국방장관은 12월 25일부로 아미미 제도를 일본에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일본에 3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상군 재건을 요구하는 대가임과 동시에, 전략적 가치가 낮고 복귀요구가 거센 아미미 제도를 반환하는 대신 오키나와 기지에 대한 무기한 보유의지를 명확히 함을 의미했다. 이어 53년 11월 미 대통령 특사로 아시아 각국을 친선 방문한 닉슨 부대통령은 서울을 거쳐 도쿄를 방문해 ‘일본의 방위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도쿄에서 마닐라로 향하던 도중 오키나와에 들러 기지를 시찰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오키나와를 보유한다’고 말했다. 이듬해인 54년의 연초 일반교서에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오키나와의 우리 기지를 무기한 유지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아미미 제도의 반환과 함께 오키나와에서는 ‘복귀 운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미 민정부의 노골적인 정책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탄압이 커져갔다.

원폭전을 무허가로 개최했다든가, 등화관제(방공훈련) 중에 기숙사에서 램프를 점등했다는 등의 이유로 류큐대학 학생 4명이 근신 처분을 받아 그 부당성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제1차 류대사건, 미 민정부의 퇴도 명령을 거부한 아미미 출신 인민당 간부의 은닉 방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인민당의 세나가 가메지로 서기장과 마타요시 이치로 토미구스크 총장이 투옥된 것을 비롯해 많은 인민당원이 체포된 인민당 사건은 이 시기의 사건들이었다. 미군의 흉악범죄도 빈발했다. 오키나와 전체에 큰 충격을 안긴 ‘유미코어린이 사건’이라는 6세 유아 폭행 참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55년 9월의 일이었다.

폭력적인 토지 접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칼과 불도저’를 동원한 미 군용지의 강제 접수도 실시되었다.

전후 오키나와는 사방이 군용지였다. 오키나와전투 말기에 접어들자 전장에서 도망쳐 다니거나 가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속속 미군 수용소로 보내졌다. 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군용지로 필요 없게 된 곳부터 차례대로 사람들이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미군이 군용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귀환을 허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미군은 헤이그 육전조약(육전법규의 관례에 관한 조약)에 의거, 일본의 독립까지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의 사용료조차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미군은 거기에 항구적인 군사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대일 평화조약이 발효된 후인 1952년 11월에는 군용지 임대차 계약을 위한 포령 91호 ‘계약권’을 공포했다. 그러나 포령 91호는 20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과 1평의 연간 임대료가 ‘콜라 1병 값도 안 되는’ 헐값이었기 때문에 군용지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용지주의 계약거부가 90% 이상이라는 사태에 직면한 미 정부는 53년 12월, 포령 26호를 공포해 ‘장기간의 사용사실에 따라 ‘목적(암목적 계약)’가 성립했다’고 간주했다.

이 시기에 일본, 미국, 필리핀, 대만, 홍콩 등의 대형 토건업체가 기지 건설 하청을 맡았다. 그 중 절반에 달하는 약 20개 사는 가고시마 건설, 시미즈 건설 등의 본토 업체였다. 기지 건설 뿐 아니라, 50년대의 오키나와는 일본의 달러 획득을 위한 시장으로서 일본의 전후 부흥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오키나와 내부에서는 미군에 의한 광대한 군용지 팽창이 군용지주의 생활 뿐 아니라 마을과 거리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광대한 가데나(嘉手納) 기지로 인해 마을이 분단된 차탄촌으로부터 가데나촌이 분리되었고, 나카구스쿠(中城)촌에서는 기타나카구스쿠(北中城)촌이 분리되어야만 했다. 미 군용지에는 일본군이 건설한 비행장 등도 흡수되었다. 일본군의 북비행장은 요미탄 비행장이 되었고, 나카(中) 비행장은 약 40배로 확장되어 가데나 비행장이 되었

다.

또 미군은 구체적인 기지 건설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해진 토지를 접수하기 위해 53년 4월 3일, 포령 109호 ‘토지접수령’을 공포해 즉시 시행하고, 마와시(真和志)촌 아자, 메카루(銘菰)(53년 4월), 오로쿠(小祿)촌 구시(具志)(53년 12월), 이에(伊江)촌 마자(真謝)(55년 3월), 기노완촌 이사하마(伊佐浜)(55년 7월) 등지에서 무장병을 출동시켜 농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무시하고 ‘총칼과 불도저’를 동원해 토지 접수를 실시했다. 폭력적인 토지 접수에 대한 각지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비폭력주의로 일관된 ‘진정 규정’을 만들어 오키나와 전역을 ‘단식 행진’ 하면서 미군의 부당함을 호소한 이예지마 섬 농민들의 독창적 투쟁은 오키나와 민중들에게 많은 동정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4년 3월 미 정부는 군용지료의 일괄 지불이라는 미 육군성의 방침을 발표했다. 일괄 지불이라는 것은, 미군이 정한 차지료(지가의 6%)의 16.6개월 분, 즉 지가상당액을 한 번에 지불함으로써 한정부 토지보유권(일종의 영대차지권)을 설정하려는 실질적 토지 매입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류큐 입법원은 만장일치로 '군용지 처리에 관한 청원'을 가결했다. 이로써 일괄 지불 반대, 적정 보상, 손해 배상, 신규 접수 반대라는 4개의 요구가 명확해졌다. 이것이 후에 ‘토지를 지키는 4원칙’이라는 오키나와 측의 통일된 요구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행정부, 입법원, 시정촌장회와 군용지주 단체인 토지련(시정촌 군용토지위원회 연합회, 현재의 명칭은 오키나와 현 군용지 등 지주회 연합회), 4자 협의회(4자협)를 결성해 대미교섭을 하게 되었다. 55년 6월의 4자협 방미대표단의 요청으로 같은 해 10월, 미하원군사위원회는 M.프라이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오키나와로 파견했다. 조사단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미 하원 군사위 특별분과위 보고서)가 이른바 프라이스 권고이다.

섬 전체 투쟁의 폭발

1956년 6월에 발표된 프라이스 권고는, 오키나와 기지가 1. 제약 없는 기지로서 2. 아시아 각지의 지역적 분쟁에 대처하는 미 전략의 거점으로서 3. 일본과

필리핀의 친미정권이 무너질 경우의 대비책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용지 정책을 포함한 그 때까지의 미군 지배방식을 기본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프라이스 권고의 골자가 전해진 56년 8월 9일 이후 오키나와에는 새로운 민중 운동의 거대한 조류가 일기 시작했다. 토지련은 총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사를 깃잡는 정책권자의 대행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 ‘행정부 및 입법원의 모든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말단 행정가인 시정촌장 및 의원, 관계자로서의 운용 토지연합회 임원’은 총 사직함으로써 군용지 정책의 강행을 저지하자고 4자협에 제안했다. 총 사직이라는 방침은 지배자가 부여한 형식 민주주의적 정치기구를 부정하고, 민중 스스로에 의한 자치 조직을 만들자는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교직원회와 청년연합회, 부인연합회 등 민간 16개 단체도 4자협과 함께 4원칙 관철 운동을 전개하고, 4자협 총 사직의 지원 역할을 할 전 주민의 투쟁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프라이스 권고의 전문이 오키나와에 도착한 6월 20일, 전 오키나와 64 시정촌 중 56 시정촌에서 일제히 시정촌 주민대회가 열려 16~40만 명의 민중(전 인구의 20~50%)이 참가했다고 보도되었다. 이어 6월 25일에는 제2회 주민대회가 나하(那覇)와 고자(古謝)(현 오키나와시)에서 열려 각각 10만과 약 5만의 민중들이 참가했다. 오키나와 민중의 쫓기는, 미-일 양 정부는 물론 전 세계에 전해졌다. 그것은 과거 10년 동안의 미군 지배에 대한 ‘섬 전체’의 총 반격이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고조된 섬 전체 투쟁에도, 장기적인 주민투쟁 조직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체제에 의해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시적 흥분에서 벗어나자 현존 체제를 모두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잃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미군 측도 일부의 보수 정치가나 지역 경제인과 연계하면서 기지 주변지역에 off limits(출입금지)라는 경제적 봉쇄를 실시하는 등 민중 내부의 모순을 이용해 이분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다시 정치적 고조의 불씨를 당긴 것은, 인민당 사건으로 투옥됐다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나가 가메지로의 나하시장 당선이었다.

세나가 가메지로를 당선시킨 최대요인은, 초대 행정주석 히가 슈헤이의 급사로 2대 행정주석에 임명된 전 나하시장 도마 주고의 발언에 대한 민중의 반발이었다. 그는 프라이스 권고가 발표된 직후 ‘소유권이 부정되지 않고 적정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일괄지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세나가의 당선 후, 그의 시장취임 저지와 불신임을 위해 갖가지 획책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결국 미군은 포령으로 세나가를 추방하는 동시에 그의 피당선권도 박탈했으나, 다음 시장에는 다시 세나가가 강력하게 추천한 가네시 사이치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혁신세력의 분열과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났다. 이를 꿰뚫어보기라도 한 듯 미국 측은 군용지료를 대폭 인상, 일괄지불 방침도 철회하고 민중과의 타협을 꾀했다. 이리하여 섬 전체 투쟁은 일단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섬 전체 투쟁은 경제적 조건 투쟁으로 끝난 듯이 보이지만, 이 투쟁으로 민중들이 얻은 자신감은 컸다. 이후 노조와 인권단체, 평화단체 등의 결성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1960년 4월 28일에는 60년대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모체가 된 오키나와 현 조국복귀 협의회(복귀협)가 결성되었다.

또한 이 투쟁으로 오키나와 문제의 존재가 일본본토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일본 정치의 장에서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다.

스나가와(砂川)와 오키나와의 차이

섬 전체 투쟁이 일본본토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시기에 일본 본토에서도 미군기지의 확장 문제와 미군 범죄와 관련된 재판권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955년에 도쿄도 스나가와(砂川) 정(현 다치카와(立川)시)에서 일어난 미군 다치카와 기지의 확장 문제와, 그에 반대한 스나가와 투쟁은 전후 일본에서의 반미 반기지 투쟁의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일본에는 어떤 종류의 반미 감정이 전후 내셔널리즘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것이 오키나와의 섬 전체 투쟁에 대한 강한 동정과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이다. 그러나 섬 전체 투쟁에 공감한 민중들도 그 대부분은 미-일 안보조약 하의 일본과 대일 평화조약 제3조 하의 오키나와 사이의 차이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전역에 군사기지를 둘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제약 하에서는 군용지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일본국 헌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의 토지수용법은 군사목적에 따른 토지의 강제수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안보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이른바 미 군용지특조법을 제정했다. 이는 미군에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토지수용법이었다. 그러나 이 특별조치법도 강제수용의 절차는 토지수용법에 준거하게 되어있었다.

또, 주일 미군의 시설과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안보조약에 근거한 형사특별법도 제정되었다. 그리고 스나가와 투쟁 때 토지점수를 위한 강제측량에 반대하는 데모대가 기지 내에 4미터 침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도쿄지법은, ‘안보조약에 근거한 미군 주둔은 위법이며, 형특별법도 무효. 따라서 사건도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유명한 다데판결이다.

결국 다치카와 기지의 확장 문제는 10년 이상 분쟁을 거듭한 끝에 결국 미군이 계획을 단념했다. 법치국가에서는 정부 간 조약상 어떠한 약속이 있어도 반드시 자유로운 기지 건설이 가능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포령이라는 군 명령 한 마디에 말 그대로 ‘총칼과 불도저’를 동원한 토지강탈이 이루어졌다.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의 지배 하에 놓이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지 건설뿐만이 아니라, 기지의 사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섬 전체 투쟁에 대한 동정과 공감은 전후 내셔널리즘을 증폭시키기는 했지만, 대일 평화조약 제3조 하의 오키나와와 안보조약 하의 일본의 차이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탓에 오키나와의 현실을 타개하는 방향성은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미-일 양 정부에 의해 안보조약 개정으로 교묘히 이용되어 갔다.

안보 개정과 오키나와로의 부담 편중

1957년 6월에 실시된 기시(노부스케)수상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회담에서 미국 측은 일본에서 모든 지상 전투부대를 철수시키기로 약속했다. 이는 도쿄에 있었던 미 극동군사령부를 폐지하고 극동전역의 미군을 하와이의 태평양군으로 통합시킨다는 군사전략 재편성의 일환이었는데, 이를 이용해 일본 국민의 반미감정을 억누르려 한 것이었다.

그러면 일본에서 철수한 지상 전투부대, 특히 해병대 등은 어디로 갔을까. ‘일본이 아닌 오키나와’로 이주한 것이다. 1952년의 안보조약 성립에서 1960년에 이 조약이 개정(현행 안보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는 4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약 2배로 늘었다. 캠프 슈와브, 캠프 한센, 북부훈련장 등 오키나와 섬 북부의 해병대 기지는 그 대부분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에 걸쳐 건설되었다. 이른바 기지 부담 편중의 제1단계이다. 그 결과, 1960년대에는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 거의 같은 규모의 미군기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일본전토 면적의 0.6%밖에 안 되는 오키나와와 99.4%의 본토에 같은 규모의 기지가 있다는 것은 기지의 밀도로 보면 오키나와는 본토의 100배라는 계산이 된다.

한편, 60년 안보 개정의 대의명분은 조약을 한없이 상호방위조약에 근접시킴으로써 조약상의 평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조약 개정 교섭 초기에는 미-일 쌍방이 미국의 시정권 하에 있는 오키나와도 미-일 공동 방위 지역에 포함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공동 방위 지역에 포함시키면 미국의 시정권을 위축시켜 오키나와 반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궤변도 동원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는 이미 미-필리핀, 미-대만, 미-한 등의 상호방위조약의 공동 방위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오키나와를 미-일 안보조약의 공동방위지역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들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연계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하여, 당시의 사회당뿐 아니라 자민당의 일부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다. 이러한 논쟁 결과, 결국 오키나와는 공동 방위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공동 방위 지역을 '일본국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 대신 제6조는 주일

미군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극동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군의 임의적 기지 사용을 막기 위해 장비상의 중요한 변경(가령 핵무기 반입)이나 일본으로부터의 직접적 전투 행동 등은 사전협의 대상으로 한다는 공문이 교환되었다. 현재의 미-일 안보조약과 이 조약을 바탕으로 주일 미군의 지위에 관해 규정한 미-일 지위협정은 이 때 성립한 이래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

베트남전쟁과 오키나와

1965년 2월, 미국은 남베트남의 내전에 전면 개입했다. 미국은 남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봉쇄 거점으로 삼고 과거 이 지역을 지배했던 프랑스를 대신해 일찍부터 남베트남의 반공군사정권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민족 독립, 평화 중립, 민주 확립을 내건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 세력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결국 전면 개입을 결의한 것이었다.

65년 2월 7일, 미군은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의 배후에 북베트남(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있다며 북폭(북베트남 폭격)을 단행했다. 그와 동시에,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대량 지상전투부대를 남베트남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는 베트남전쟁의 전선기지가 되었다. 북폭이 개시되면서 오키나와의 주요 도로는 군수물자와 부대를 가득 싣고 항구로 향하는 군용 트럭과 전차로 뱅뱅했다. 공군기지에서는 수송기와 전투폭격기가 베트남을 향해 출격했다.

요코스카(横須賀), 이와쿠니(岩国), 사세보(佐世保) 등의 주일 미군도 베트남으로 출격했다. 그러나 오키나와를 경유했다는 이유로 이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는 오키나와로의 이동은 전투 작전 행동이 아니며, 오키나와에서 베트남으로의 출병은 오키나와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1960년의 조약 개정 후 미-일 안보조약 적용 지역 밖에 놓인 오키나와에 부여된 역할 중의 하나는 주일

미군의 자유로운 군사 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 오키나와는 미-일 안보체제를 밖으로부터 지원하는 역할을 떠맡은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내전에 대한 전면 개입은 미국에 큰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은 전쟁의 절정기에 한국전쟁의 병력을 웃도는 약 55만 명을 투입, 무차별 폭격은 물론 게릴라로의 수송로를 파헤친다며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하는 화학 작전까지 벌였으나 군사적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국제정치 상에서도 이전 이 지역을 지배했었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북폭을 비난하는 등 그 고립화 또한 심각한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 전쟁의 정당성을 납득시키지 못했으며, 전쟁으로 내몰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반전운동이 크게 고조되었다. 그것은 미국사회와 군대에서 주로 하층 지위에 속하는 흑인들의 해방운동과도 결부되어 갔다. 베트남 반전운동은 유럽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베트남정책의 파탄은 경제적인 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 부의 절반을 독점했던 미국은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망을 포진하고 반공정권을 경제적으로도 지원하며 세계적으로 군림하고 있었으나, 1950년대 말에는 이러한 정책에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제수지는 악화되고 달러위 기설이 터져나오게 되었다. 수렁에 빠진 베트남전쟁은 이러한 상황에 박차를 가했다. 사회적 황폐화도 심각해져 갔다. 미국사회가 범죄와 마약에 병들게 된 하나의 계기는 명분 없는 베트남전쟁이었다.

1973년 3월, 마침내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며 75년 4월에 남북베트남은 통일되었다. 미국 측에서 본 베트남전쟁은 5만 명의 전사자와 100만 명 이상의 베트남 민간인 희생자를 내고 베트남 전역을 황폐화시켰을 뿐인 전쟁이었다. 20년이나 흐른 뒤 당시의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베트남전쟁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나 전쟁을 지지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전(反戰)복귀’로의 전환

미국의 베트남 정책 파탄으로 오키나와 지배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의 대중운동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크게 발전해 갔다.

당시까지의 오키나와 대중운동의 첫째 목표는 일본 복귀였다. 거기에는 일본에도 미군기지가 있지만 오키나와에서는 민중의 제권리가 모두 군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한 상태를 ‘본토 수준’으로 시정한 뒤 일본 전체의 기지 철거에 나서자는 것이 당시까지의 대중운동의 최대공약수적 사고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실제로 전쟁에 사용되는 기지의 존재에 대한 목인이 베트남 민중에 대한 가해자적 역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싹텃고 이는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키나와의 보수 세력은 대중운동의 중심이었던 교직원의 정치 활동 제한·쟁의행위의 금지·근무 평가 실시 등을 포함한 교공이법²⁾의 입법화를 계획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십 수년 전에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회 내 다수파가 경찰력을 총 동원해 원외 대중운동을 억눌러가며 체결을 강행하려한 교공이법은 원외 대중운동의 압력에 의해 사실상 폐안되었다. 이것이 67년 2월의 일이다. 50년대에는 ‘총칼과 불도저’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던 미군도 자신들의 폭력장치의 발동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는 파탄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각되는 오키나와 반환

한편, 일본은 1960년대에도 계속해서 경제대국으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에 따라 60년대 말에는, 일본과 미국의 상대적 역학 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미-일 정치·군사·경제적 역할분담의 조정이 필요시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평판이 좋지 않은 미국의 베트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미국의 국제적 고립화를 막는 노력을 하는 것, 자위대를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 동남아시아의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 원조를 대신하는 것 등이었다.

2) 교육공무원 특별법안.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교육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그 책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의 임면, 급여, 징계, 복무 및 연수 등에 대해 규정한 법률.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많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60년에 개정된 안보조약의 고정기한은 10년이었기 때문에 1970년에는 기한이 끝나게 되어있었다(그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이 조약의 종료를 통지하면 1년 후에는 조약은 종료된다고 되어있다).

1970년에는 60년 안보조약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안보의 근본적 재검토와 폐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일 안보체제 하의 일본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부각된 것이 오키나와 반환 문제였다.

교공이법 제정이 저지된 67년 봄, 일본 정부는 돌연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국민적 염원’, ‘조국 복귀라는 민족적 비원’의 실현이야말로 일본 외교의 긴급 과제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반환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문제였다. 오키나와에는 1951년 이래 복귀 운동의 큰 흐름이 있었고, 60년대에 접어들자 본토에서도 오키나와 문제에 관한 인식이 서서히 확대되면서 오키나와 반환운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에게도,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의 발걸음을 내딛으려는 시기에 자국영토의 일부가 동맹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65년 8월, 전후 일본의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한 사토(에이사쿠)수상이 ‘오키나와의 조국복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일본의 전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였다.

이렇게, 미-일 동맹의 재편성, 일본과 미국의 역할 분담의 재조정을 둘러싼 논의는 오키나와 반환 교섭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안보 논의는 가능한 피하면서 동남아시아의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 원조의 부담이나 자위대 증강, 베트남 정책의 지지가 모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오키나와를 반환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라고 보았다.

B52 철거 투쟁

미국의 오키나와 단독 지배가 파탄을 맞고 오키나와 반환 교섭이 정치 일정에 올랐을 무렵, 베트남의 전쟁 국면은 점점 긴박함을 더해가고 있었다. 이미 65년

시점에서 꺾을 근거지로 하는 B52가 태풍에 의한 피난을 구실로 가테나 기지로 이동해 그곳에서 베트남 폭격에 나서고 있었으나, 68년 2월 5일부터는 가테나에 상주하며 베트남에 출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 오키나와에서는 B52 철거 투쟁이 크게 고조되었다. B52 철거 투쟁은 기지의 움직임에 직접 적으로 맞선 최초의 대중적 투쟁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지노동자 조합인 전군노³⁾(49~51페이지 참조)가 100%연휴 투쟁이라는 취지로 24시간 전면 파업을 실시해 미군에 큰 충격을 안겼다. 포령 116호에 의해 쟁의 행위를 금지당했던 기지 노동자에 의한 최초의 파업이었다.

한편 미국은 B52를 가테나에 상주시키기 직전, 주석공선의 실시를 발표했다. 오키나와 반환까지 염두에 둔 정책이었으나, B52의 가테나 상주화에 반발하는 민중의 움직임에 선수를 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68년 11월의 주석공선에서는 오키나와 교직원회 회장으로 일본 복귀 운동의 선두에 서온 야라 조보가 당선되었다.

그 직후, B52가 가테나 기지에서 이륙에 실패하면서 추락해 불타는 사고를 일으켰다. 주석 선거에 가려져 있었던 B52 철거에 대한 원성이 다시금 크게 높아졌고, ‘생명을 지키는 현민공동투쟁’이 결성되었다. 현민공동투쟁은 B52가 상주한 지 1년째에 해당하는 1969년 2월 4일에 ‘B52 철거·핵잠수함 기항 저지’를 내건 총 파업을 실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미군기지의 안정된 운용을 전제로 하는 오키나와 반환 교섭을 추진하고 있었던 미-일 양 정부에게 이는 중대한 사태였다. 일본 정부는, 미 군부가 기지의 유지에 불안을 느끼게 되면 복귀가 지연될 지도 모른다면 야라 주석을 설득하는 등 다양한 공작을 벌였다. 총평⁴⁾, 전로 등 경제투쟁 지상주의적 경향을 띠는 일본의 노동운동 주류도, 오키나와의 2·4 총 파업이 베트남 반전운동과 연계되면서 대두해온 반전파 노동운동을 고무시키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본격적인 2·4 총파업 지원 태세는 갖춰지지 못했다. 결국 2·4 총 파업에 대비한 태세는 야라주석의 중지 요청을 계기로 무너졌다.

이 시기에 오키나와와 본토 양쪽에서 오키나와 반환은 당연하나 이를 이용한

3) 全軍勞 : 전 오키나와군 노동조합

4) 總評 : 일본노동조합 총 평의회

안보 강화에는 반대한다는 70년 안보·오키나와 투쟁이 크게 고조되면서 50년대의 섬 전체 투쟁 때와는 다른 공통인식도 생겨나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오키나와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오키나와 반환은 무엇이었나

2·4 총파업을 가까스로 면하고, 소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미국을 방문한 사토 수상은 69년 11월 닉슨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키나와를 1972년 중에 일본에 반환한다는 합의에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일 군사 동맹 재편 강화의 일환에 지나지 않았다.

오키나와는 ‘본토 수준’에 ‘핵 없이’ 반환된다고 강조되었으나, 미-일 공동성명(사토-닉슨 공동성명)에서는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과 하나이며, 대만해협 안전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이루어졌다. 사토 수상도, 이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유사시 일본으로부터의 미군 전투 작전 행동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미대통령이 ‘일본 국민의 핵에 대한 특수한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사전 협의 체도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고 약속함으로써 ‘핵 없이’ 부분이 보증되었다고 설명되었으나, 강조 부분의 불필요한 문구가 핵 반입에 관한 밀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남겼다. 그리고 그 후의 관계자(예를 들어 와카이즈미 게이, 25페이지 참조)의 증언과 국제정치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밀약의 존재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또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 미국 측이 '자발적 지불'을 약속한 군용지의 원상 회복 보상비를 일본이 대신한다는 밀약의 존재 등도 밝혀져 있다).

또한 오키나와가 ‘일본국 시정 하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자위대가 배치되었다. 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자위대가 방위하고, 미군은 외부에 대한 공격에 전념한다는 역할 분담에 기초한 공동 작전 태세가 확립된 것이다. 중국은 사토-닉슨 공동성명을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키나와에서는,

자위대 배치 강행이 다시금 오키나와 전투 당시 일본군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0년 안보개정이 오키나와의 분리와 미군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하는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였던 데 대해, 72년 오키나와 반환은 오키나와의 일본에 대한 통합을 전제로 하는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였다. 그리고 이 안보강화는 안보조약의 문구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것으로, 당연히 국회에서의 심의도 없이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토-닉슨 공동성명으로부터 1주일 후, 2천 수백 명에 이르는 기지 노동자의 대량 해고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달러 방어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재외기지의 재편합리화 정책이었다. 당시 2만 명을 넘었던 기지 노동자는 70년대 중반까지 약 7천 명으로 감축되었다. 미국이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유지한 상태로는 이러한 대량 해고는 불가능했다. 실업 대책의 책임을 일본 정부에 전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미 미국은 오키나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능력을 잃고 있었다.

기지를 유지·강화하면서 노동자만을 대량 해고하는 정책에 대해 전군노는 ‘해고하려면 기지를 반환하라’를 구호로 격렬한 투쟁을 벌였으나,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키나와 반환협정 심의에 오키나와 대표도 참가시켰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국정참가선거가 열려, 70년 11월, 오키나와에서 5명의 중의원의원과 2명의 참의원의원이 선출되었다.

한편, 미군범죄 및 사건·사고의 빈발과 그에 대한 불공평한 처리, 독가스 무기 철수의 지연 등 미군 지배에 대해 쌓여있었던 불만이 많은 미군 차량과 기지 일부를 불태운 고자폭동으로 번지며 폭발했다.

이리하여, 71년 7월의 닉슨 미대통령의 방중발표, 8월의 달러방위 비상사태선언(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이라는 이중 닉슨쇼크로 상징되는 전후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지각 변동과 궤를 같이하면서, 오키나와는 1972년 5월 15일을 맞아 일본이 되었다.

제2장 일본이 된 오키나와

쑥쑥한 복귀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복귀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주최한 복귀 기념 식전이 동경의 일본무도관과 오키나와의 나하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동경의 식전에서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전쟁에 의해 잃어버린 영토를 평화로운 시기에 외교 교섭으로 회복한 것은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며, 이를 가능케 한 미-일 양국의 깊은 우호를 통감한다’고 말하고, 식전은 수상이 선창한 ‘천황폐하만 세’를 삼창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오키나와에서 선출된 중참 양원의원 7명(24페이지 참조)은 전원 이 식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사회, 공산 양당은 총평, 중립노련 등과 함께 메이지공원에서 ‘핵도 기지도 없는 오키나와의 전면반환, 베트남 출격반대’ 등을 내걸어 통일중앙집회를 열고 도내를 데모 행진했다.

나하의 식전회장에서는 야라 조보 오키나와 현 지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특별한 감개’를 표명하면서도, ‘복귀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우리들의 절실한 바람이 담겨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언급, 미군기지 문제 등을 지적한 뒤 ‘오키나와가 그 역사상, 항상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사실을 배제하고(중략),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현 구성에 총력을 다할 결의’라고 밝혔다.

나하 시민회관에 인접한 요기공원에서는 복귀협(오키나와 현 조국복귀 협의회)이 주최하는 ‘오키나와 처분 항의, 사토내각 타도, 5·15 현민 총 쫓기대회’가 열렸다. 미야코와 야에야마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다.

72년의 오키나와 반환은, ‘핵 배제·본토 수준’의 반환이라고 일컬어졌다. 당시 사토수상의 밀사로 활약했던 와카이즈미 게이 전 교토산업대 교수는 서거 2년 전에 간행한 저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⁵⁾(문예춘추, 1994년 5월)에서, 미국이 핵 반입에 관한 사전협의 시 일본이 항상 예스로 대답한다는 보증을 얻고 싶어했기 때문에, 키신저 미대통령 특별보좌관과 협의 후 핵 반입에 관한 비

5) 원제 : 『他策ナカリシヲ信ゼムト欲ス』(영역 : 『The Best Course Available: A Personal Account of the Secret U.S.-Japan Okinawa Reversion Negotiations』)

밀합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사토수상과 닉슨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핵 문제와 관련, 1971년의 소위 오키나와 국회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이에지마 섬의 핵 모의폭탄 투하 훈련이 있다. 정부는 당시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가령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복귀 후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훈련은 피하도록 미국 측에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1974년 8월의 국회에서 같은 문제가 논의되자, 미국 측이 7월에 핵 모의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뒤 ‘국민감정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모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이를 용인했다.

다음으로 ‘본토 수준’에 관한 것인데, 본토 수준이란 미-일 안보조약과 지위협정이 특별한 예외적 조건 없이 오키나와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면, 미-일 안보조약 하에서는 건설 불가능했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미-일 안보조약 하에서 어떻게 유지해 나가려 했는가. 그것을 보다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뒤에서 서술할 ‘5·15 합의 메모’와 공용지법이였다.

오키나와에서는 이 ‘본토 수준’이라는 말에 대해 미군기지를 적어도 본토 수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 이해의 근거로 해석하려는 경향도 많았으나 일본 정부의 속내는 자위대를 ‘본토 수준’으로 배치하는 것이였다. 물론 일본 정부도 오키나와 기지의 과밀한 상태로 인해 오키나와 사회의 정상적인 전개가 저해됨을 고려하면 정리·축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미군기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리·축소를 실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복귀시점 기준으로, 오키나와에는 27,850 헥타르의 미군기지(전용시설)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키나와의 현토 면적의 12%를 웃돌고, 오키나와 섬의 자그마치 22%를 넘어선 것이였다.

반환으로 오키나와에 집중된 미군기지

여기에서, 일본본토에 있는 미군기지(전용시설)와 대비시키면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면적의 추이를 간단히 정리해 두도록 하자.

대일 평화조약과 구 안보조약이 성립된 1952년 경, 일본(본토)에는 약 13만 헥타르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이 기지들은 60년 안보개정 무렵까지 4분의 1인 약 3만 헥타르로 감소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는, 그 사이에 미군기지가 약 2배로 늘었다. 해병대가 본토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이었다.

17페이지에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의 일본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면적상으로는 거의 같은 규모였다. 그러던 것이 오키나와의 72년 반환이 합의된 1969년 무렵부터 본토의 미군기지는 더욱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968년 3월 말일 현재 약 3만 헥타르였던 미군기지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시점에서는 19,702 헥타르(오키나와는 26,569 헥타르)로 줄면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기지 비율은 거의 3대 1이 되었다. 즉, 일본 전체의 미군기지(전용시설) 중 약 4분의 3이 국토 면적의 0.6%인 오키나와에 집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72년 오키나와 반환을 전후한 몇 년 동안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는 약 3분의 1로 감소했으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몇%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즉, 구 안보조약의 개정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반환 때에도 오키나와에 기지를 집중시키는 식으로 일본 전체의 미군기지 정리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나하 공항에서 이주할 미 해군 대잠수함 초계기 P3의 이주 장소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본토가 아닌 오키나와 어딘가로’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복귀 후 24년이 지나고서야 미 정부의 공문서를 통해 드러났다(1996년 8월 21일, 지지(時事)통신·워싱턴 발).

1972년 1월 미국의 샌클레멘테에서 열린 사토 수상과 닉슨 대통령의 회담에 동석한 후쿠다 다케오 외상(후의 수상)은 ‘P3가 이와쿠니 기지(야마구치현)나 미사와(三沢) 기지(아오모리 현)로 이전되면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 뒤, ‘일본 본토가 아닌 오키나와의 다른 기지로 이전하도록 로저스 국방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지 비율에 대해 언급해두기로 하자. 오키나와로의 기지 집중·과밀상태를 보일 경우, 복귀 후 약 10년간은 신문 등의 보도기관이나 대중 운동단체 모두 ‘오키나와에는, 전 주일 미군기지의 약 53%가 집중되어 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미군 전용시설과 일시 사용 시설을 합한 계산에 의한 숫자이다. 예를 들면 1974년 말 오키나와에는 26,569 헥타르의 전용시설과 500 헥타르의 일시 사용시설, 총 27,069 헥타르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같은 시기, 일본 본토에는 9,702 헥타르의 전용시설과 14,243 헥타르의 일시 사용시설, 총 23,945 헥타르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미군기지의 약 53%는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1982년 9월부터 방위시설청과 오키나와 현(이 단계는 보수현정)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44%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반환된 것은 아니었다. 82년 9월부터, 홋카이도(北海道)의 치토세(千歳) 공항 등 3 시설이 미군의 일시 사용 시설이 됨에 따라 본토의 미군기지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군사기지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그것이 또 84년 10월 이후에는 약 30%가 되었다. 이는 1년에 단 몇 일간이라도 미군과 공동 사용하는 자위대의 훈련장 등 일시 사용 시설을 계산에 넣은 숫자 늘음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보도기관과 대중운동 단체는 미군기지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전용시설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1995년 무렵부터의 오키나와 기지의 정리·축소 논의에서는 정부 측도 75%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미군 우선을 인정한 '5·15 합의 메모'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한 1972년부터 73년 사이에는, 72년 2월 27일의 미-중 공동성명(상하이 코뮌니케), 9월 29일의 중-일 공동성명(일중국교회복), 73년 1월 28일 베트남 평화협정 발효(베트남전쟁 정전) 등, 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베트남에서 철수한 해병대에 의한 즉응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재편성이 진행되었으며, 해병대는 그 주요기지인 캠프 한센·캠프 슈와브, 북부 훈련장 등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 해병대는 1973년 4월 24일, 복귀 후 처음으로 현도 104호선을 봉쇄해 현도너머 실탄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본토에서는 유례를 찾

아볼 수 없는 미군에 의한 현도 봉쇄훈련 때문에 현은 즉시 항의와 중지 요청을 했으며 대중단체도 항의 행동을 전개했으나, 미군은 현도 104호선에 대해 ‘미군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주민의 사용을 인정한다’라는 합의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다며 이른바 ‘5·15 합의 메모’의 존재를 밝혔다. 안보조약 제6조를 근거로 미군이 사용하는 개개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협정은 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제25조가 정하는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 정부가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복귀 후에도 미군이 사용하는 88개 시설에 대해서는, 복귀 당일의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합의 사항이 협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5·15 합의 메모’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미-일 간의 비밀사항이라며 1997년까지 메모의 전모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위도 있어, 항의 행동은 봉쇄도로로의 승차 진입이나 착탄지에 잠입해 연기를 피워 훈련을 저지하는 실력 저지 투쟁의 방향으로 발전해 경찰과 미군에 맞서는 팽팽한 대치 속에서 74년 10월 이래 훈련은 저지되었다. 이 투쟁을 현장의 지명을 따 기센바루(喜瀬武原)투쟁이라하며, 1970년대의 반전·반 기지 투쟁의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76년 7월에는 잠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강행하려 해 포탄 파편으로 부상자가 나거나, 같은 해 9월 노조원 4명이 이듬해인 77년 4월 학생 3명이 형특별 위반(미군기지 침입)으로 체포되면서 실력 투쟁은 끝나고, 훈련은 재개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20년에 걸쳐 훈련 때 마다 항의 행동이 반복되었다.

미군 범죄에 대해서도 복귀 후 그 빈도와 질에 큰 변화는 없었다. 복귀 후 최초의 살인사건은 72년 9월에 발생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해병대원이 기지노동자를 근거리에서 사살한 것이다. 미군은 당초 공무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후 범인이 임의 출두해 나하 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범행 시 심리상실 상태였다고 하여 무죄 처리되었다.

또 핵 모의 폭탄 투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던 1974년 7월, 이에지마 섬에서는 풀을 베던 청년을 미군이 차로 몰아붙이고 신호용 권총으로 쏘아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촌의회, 현, 현의회 등의 항의에 대해 미 공군 사

령관은 공무 증명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현지사 수신의 문서로 회답했으나, 그 후 공무 중에 일어난 사건이며 제1차 재판권은 미국 측에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제1차 재판권을 둘러싸고 미-일 간 견해가 대립,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본 측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일본 정부가 현민대회에서 격렬하게 규탄받는 상황으로까지 문제가 발전했다.

혼란을 야기한 일본 정부의 군용지 정책

다음으로 미 군용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군 지배 시절, 미 군용지는 류큐 정부가 개개의 군용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미군에 전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당연히 최종적인 재정부담은 미국 측이 지고 있었다. 그러나 복귀되면서 안보조약과 지위 협정이라는 '시설 및 구역'(미 군용지)의 제공은 일본 정부의 의무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3만 명에 가까운 군용지주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거의 모든 군용지는 사실상 강제 접수된 토지였기 때문에 미 군용지 제공을 위한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군용지주가 상당수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되었다. 72년 반환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복귀와 동시에 군용지 사용료를 평균 6배, 협력 사례금을 포함해 6.5배로 끌어올렸다. 이미 달러 위기에 허덕이고 있었던 미국은 흉내도 못 낼 방법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군용지 사용료를 6.5배로 끌어올린 난폭한 정책은 복귀 후 오키나와의 국지적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고 경제적 혼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나, 그것은 정부의 정책 자체만 놓고 보아도 커다란 모순을 내포한 것이었다.

일례로 정부는 오키나와 농업의 기간 작물로 사탕수수를 중시해 매입하고 있었다. 복귀 이듬해인 1973년의 사탕수수 생산액(농림성 매입액)은 약 138억 엔, 수확면적은 23,360 헥타르. 이에 대해, 군용지료는 약 182억 엔. 미 군용지 중 군용지료의 지불을 필요로 하는 민·공유지는 약 18,670 헥타르였으므로 1 헥타르 당 군용지료는 97만 엔, 사탕수수는 59만 엔 꼴이 된다.

단순히 비교하면 균용지료는 사탕수수 가격의 1.6배 이상이라는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되면 농업노동은 마이너스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게 된다. 즉 균용지는 균용지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별이'가 좋으며, 농지로 경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단순비교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방위시설청의 균용지료 산정과 농림성의 사탕수수 매입가격 산정 사이에는 분명히 큰 모순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순은 매년 확대되어 갔다.

일본 정부의 균용지 정책은 복귀 후의 오키나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해 의도적으로 모순을 확대시키기는 했으나, 이 정책을 이용한 정부는 몇 년도 안 되어 1950년대에는 섬 전체 투쟁의 견인차 역할을 한 토지련을 기지 유지 정책의 중심축으로 변질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방위 시설 주변의 생활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74년 6월)에 근거, 기지주변 정비비라 총칭되는 보조금과 교부금 등도 조금씩 기지가 소재하는 시정촌을 끌어들이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 시점에서 약 3000명의 균용지주가 계약 거부 의향을 표명했다. 이것이 반전지주(反戰地主)의 탄생이다.

반전지주(反戰地主)와 공용지법

이를 예상한 정부는 1971년 12월 말, 이른바 공용지법('오키나와의 공용지 등의 잠정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미군 지배 하에서 공용지(사실상 균용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복귀 후 5년간은 공용지(균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 지배 시절의 포령·포고에 필적할 만한 악법이었다(예를 들면 포고 26호, 12페이지 참조).

오키나와에서는 복귀협을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에서 류큐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법률 제정에 반대했으나, 국회는 대혼란 속에 71년 12월 30일, 이 법률을 포함한 복귀 관련 4법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리하여 복귀 후 5년간, 일본 정부(나하 방위시설국)는 공용지법에 근거해 토지를 강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반전지주를 계약으로 몰아넣기 위해 계약지주와 미계약지주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등 갖은 수단을 사용했다. 이러한 나하 방

위시절국의 편 가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입법인 공용지법의 기한이 끝나는 1977년 5월 14일 시점에서 여전히 396명의 계약거부 지주들이 남아있었다.

이 지주들은 1971년 12월 9일, 공용지법이 통과하기 20일 정도 전에 반전지주회(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군용지주회)를 결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거부 지주 전원이 반전지주회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으며, 약 30%의 계약거부 지주들은 조직에 참가하지 않았다. 반전지주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사회적인 여러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전지주들은 직업도, 연령도, 이데올로기도 각양각색으로, 자신들의 토지를 더 이상 군용지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이 공통점이었다.

반전지주회 결성을 원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한 것은 복귀협이었다. 그러나 복귀협은 스스로 추진해 온 ‘평화헌법 체제로의 복귀’ 혹은 ‘반전 복귀’와 미-일 군사동맹 재편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복귀라는 현실과의 괴리에 머물러 있었다. 복귀협을 존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존속시킬 것이라면 그 과정은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내놓지도 못하고, 복귀로부터 정확히 5년이 흐른 1977년 5월 15일에 해산했다. 복귀협은 복귀운동의 이론적 총괄은 하지 못했으나, 72년 오키나와 반환정책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반전·반기지 투쟁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공용지법에 반대하면서 반전지주회를 지원해왔다.

76년 2월 16일, 사회대중(사대), 사회, 공산, 공명 4당을 포함한 18단체에 의해, 복귀협의 후계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헌공투(공용지법 위헌소송지원 현민공투회의)가 결성된 것이다. 권력의 직접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반전지주당파를 초월한 다양한 존재였다는 것도, 이 폭넓은 조직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3월 8일, 공용지법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공용지법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9조, 법 하의 평등을 부르짖은 헌법 제14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 적용되는 특별법은 주민 투표를 필요로 한다는 헌법 제95조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미군 지배 시절 대중운동의 조직적 기반이었던 복귀협이 그 역사적 역할을 끝

낸 뒤, 미-일 안보체제 하의 새로운 과제로 향해야 할 조직으로서 위헌공투가 남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자위대 배치에 대한 저항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군사상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자위대의 오키나와 배치였다. 자위대 배치는, 사토-닉슨 공동성명(1969년 11월)의 ‘복귀 후 오키나와의 국지방위 책무는 일본자체의 방위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문구에 따라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조인된 71년 6월, 구보 다쿠야 방위청 방위국장과 주일 미 대사관 수석 군사대표 커티스 해군중장과 사이에서 교환된 ‘일본국의 오키나와 방위책무 인수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복귀 후 약 반년 사이에 3,200명이(실제로는 주민감정에 대한 배려에서 2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300명 남짓한 인원을 삭감했다), 최종적으로는 6,400명의 자위대가 오키나와에 배치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보기에, 오키나와가 일본이 된 이상 ‘본토 수준’으로 자위대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론조사 숫자만 놓고 본다면 일본 국민의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복귀 1년 전인 71년 8월 하순에 아사히(朝日)신문이 본토와 오키나와에서 동시에 실시한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키나와에 자위대가 배치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은 본토가 54%, 오키나와는 22%, 반대하는 사람은 본토가 25%, 오키나와는 56%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배치되는 자위대 사령관에 오키나와 출신자를 임명하는 등 주민감정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배려는 보이면서도, 자위대 배치 방침을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민중의 의사에 반한 자위대의 오키나와 배치는, 자위대(일본군)의 ‘오키나와 진주’ 또는 ‘오키나와 파병’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72년 4월 복귀협의 항의 성명은, ‘일본군(자위대)의 오키나와 진주’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이에 호응해 같은 해 5월 구마모토의 육상자위대 서부방면 총감부 앞에서 열린 총평 등의 항의 집회에서는 ‘오키나와 파병’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자위대 배치 반대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오키나와의 민중들에게 ‘일본군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다시금 던졌다는 점이었다. 민중들이 체험한 오키나와 전투에 관해서는 1950년에 출판된 『철의 폭풍』(오키나와타임스 사) 이래 많은 출판물이 간행되어왔다. 그 중에는 일본군에 의한 오키나와 주민 학살과 집단 ‘자결’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출판물에는 일본군을 규탄하는 필치는 전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으며, 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비극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일본군의 행동을 ‘천황의 군대’의 본질과 관련시켜 추궁하려 한 것은 1970년 대 들어, 즉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오키나와 배치를 무리하게 관철하기 시작하려던 때부터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오키나와 교조(오키나와 현 교직원 조합)가 『이것이 일본군이다』라는 팸플릿을 펴냈던 무렵부터이다. 자위대 배치 반대투쟁은, ‘이민족 지배’와의 투쟁 속에서 간과되어 왔던 오키나와전투의 본질을 재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위대 배치 반대 투쟁은 복귀협 등의 대중운동 단체만 전개했던 것은 아니었다. 1972년 12월 5일, 나하시는 ‘자위대 시설 내에는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하는 시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시설 내에 거주하는 대원의 주민등록을 보류해 전국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12일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 시설 내에도 지자체 행정권이 미친다고 인정하자 업무를 재개했다. 이것도 주민의 반 자위대감정을 반영한 행정 대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오키나와 현은, 1979년까지 전국 47도도부현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기관 위임사무인 자위관 모집 업무를 거부한 현이었다.

시기에 따른 '히노마루'의 의미 변화

자위대 배치 반대 투쟁과 오키나와전투의 관계에 관련해 ‘히노마루’의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히노마루’는 ‘평화헌법 체제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복귀운동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민족 지배’ 하에서의 저항의 상징으로서 정당화

되고 있었다. 사실 미군 지배 하에서 일본복귀 운동이 시작됐을 무렵에는 ‘히노마루’도 자유롭게 내걸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항의 상징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히노마루’가 맡아온 역사적 역할에 대한 비판을 거친 뒤 새로운 투쟁의 상징으로서 주체적으로 선택되어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러한 비판을 배제한 채 자동적으로 복귀해야 할 전후 일본(평화헌법을 보유한 민주국가 일본)의 상징으로 자리바꿈한 것이었다.

따라서 도항 제한도 어느 정도 느슨해진 1960년대 중반부터 오키나와를 방문하게 된 본토의 혁신 단체 활동가들은 미군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필러이는 ‘히노마루’에 위화감을 느끼고, 반대로 오키나와를 방문한 각료들은 거기에 감격했던 것이다.

그러나 72년 반환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히노마루’는 대중운동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복귀 후에는 학교행사 등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적극적으로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복귀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오키나와 특별국체⁶⁾(와카나츠 국체, 1973년 5월 3~6일)는 수만 오키나와 민중이 ‘기미가요’ 제창을 강요당하면서 ‘히노마루’ 제양과 부딪치는 전후 최초의 기회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위화감은 흐르고 있었지만 적극적 비판이나 저항은 없었다. 자위대 팀(사가 현 대표 소프트볼 팀)의 출전문제는 커다란 정치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노마루’가 전전·전후의 역사적 역할까지 포함해 적극적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복귀 후 십 수 년이 흘러 권력이 ‘히노마루’를 강요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시점에서였다.

'혁신 왕국'

한편 복귀를 전후한 약 10년 간, 1968년경부터 78년경까지 오키나와는 ‘혁신 왕국’이라 불렸다. 1968년 11월, 야라 조보가 공선주석이 된 시기가 그 기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6) 國體 : 국민체육대회

1972년 5월 15일, 야라 조보는 그대로 전후 첫 오키나와 현 지사가 되었는데 다음 달인 6월 25일에 치러진 지사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76년 6월, 임기만료로 은퇴한 야라 조보를 대신해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지도자 다이라 고이치가 지사로 취임했다. 그 사이 오키나와의 10개 시 중 8곳의 시장은 혁신파가 차지했다. 그러나 다이라 지사는 임기의 반을 남기고 병으로 쓰러져, 78년 12월의 지사 선거에서는 68년의 주석공선에서 야라 조보에게 패했던 니시메 준지가 당선, 혁신 왕국에 종지부를 찍었다.

혁신 현정은(그리고 혁신 시정촌도), '핵도 기지도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 현'을 목표로 내걸고 있었다. 그리고 자위대 배치에 반대해 미군기지의 축소·철거를 요구, 미군범죄와 사고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런 점에서는 민중의 요망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일본 정부와의 날카로운 대립은 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혁신적 대중단체의 행동을 억제했다. 후자의 전형적인 사례는 1969년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B52의 철거를 요구한 총파업을 중지시킨 것이다(22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전계 이와나미 신서 『오키나와 전후사』 참조). 또 미군기지의 철거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현유지인 미 군용지의 임대차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미 군용지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손실 보상금은 받겠다는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미 군용지의 사용 사실을 추인했다. 모든 혁신 시정촌이 이 각서방식을 따랐다.

1차 진흥 계획과 오키나와 해양 박람회

'핵도 기지도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 현'을 목표로 하는 혁신 현정과 미-일 군사동맹의 유지 강화를 지향하는 미-일 양 정부 간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혁신 현정의 '풍요로운 오키나와 현' 구상(혹은 환상)과 정부의 오키나와 진흥 정책은 미묘하게 교차하면서 공명하고 있었다.

복귀에 즈음해 일본 정부는 1972년부터 81년까지 10개년 오키나와 진흥 개발 계획(1차 진계)을 세워, 이 계획에 따른 제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오키나

와 진흥 개발 특별조치법(오키나와 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계획은 가혹한 오키나와 전투와 본토로부터 오랫동안 동떨어져 있었던 결과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조속히 시정하고, 자립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 조건의 정비를 목표로 했는데, 이는 요컨대 19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 정책을 따르면서 거액의 공공투자에 의한 사회 자본의 내실화,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한 기업 유치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의 이른바 기폭제로, 오키나와 국제 해양 박람회(1975년 7월 20일~76년 1월 18일)등의 복귀 기념사업이 계획되고 있었다.

오키나와 진흥 개발 계획은 오키나와 현 지사에게 계획원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원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흥 개발 계획에 관한 기본적 발상 자체에 대해 정부와 현 사이에 큰 모순은 없었다. 그보다 그것들은 류큐 정부의 ‘오키나와 장기 경제 개발 계획’(1970년 7월)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해양박람회에 대해서도 71년 8월에 류큐 입법원이 유치결의를 한 바 있다. 이 계획과 오키나와 진흥법에 의거한 고율 보조(예를 들면, 국도와 현도의 신설 등은 100%보조) 등에 의한 거액의 공공투자로서 도로, 공항, 항만, 상하수도, 댐, 의무 교육시설의 정비 등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광대한 미군기지를 성역화해 손을 대지 않았던 점, 엔 절상에 이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오일쇼크라는 외부환경의 변화 등도 있어 오키나와 진흥 개발 계획 중 목표수치를 달성한 것은 인구 증가뿐이었다.

또, 투입된 거액의 공공투자는 오키나와에 축적되지 않고 그대로 대기업을 경유해 본토로 흘러들어갔다. 이 집중적인 공공투자는, 오키나와에서는 본토 대기업과 합작하거나 하청을 받는 형태로 공공투자 의존형 건설업을 기형적으로 발달시킨 한편, 복귀 기념사업을 겨냥하거나 정책적 요청에 따라 과잉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지방기업이 차례로 도산하는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 본토자본에 의한 토지의 매점과 난개발도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적토오염에 의한 산호의 사멸 등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복귀 기념사업에는 경제개발의 기폭제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서술한

것처럼 자위대 배치 반대투쟁 과정에서 다시금 ‘천황의 군대’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그것은 전후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천황제 논의의 시작이기도 했다. 계간 잡지 『신 오키나와 문학』의 ‘천황제’ 특집(오키나와타임스 사, 1975년 4월 29일)은 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품절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양박람회를 계기로 황족이 자유롭게 오키나와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 하에 해양박람회 명예총재로 황태자(현 천황)를 2,400명의 경찰관과 함께(그 밖에 오키나와현경이 1,400명을 동원) 오키나와로 보냈다. 그리고 황태자는 히메유리 탑⁷⁾에서 화염병 투척이라는 곤경을 당했다.

새로운 가치관을 제기한 ‘긴(金武)만을 지키는 모임’

한편, 화제를 경제 개발 계획으로 되돌리면 풍요로운 오키나와 현을 지향하는 구상 중에서 전략사업으로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석유 산업이었다. 이는 오키나와 섬의 동해안 일대를 매립해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광대한 임해형 공업지대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류큐대학 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오키나와 경제개발의 기본과 전망』, 류큐 정부의 ‘오키나와 장기 경제 개발 계획, 총리부의 ‘오키나와 경제 진흥의 기본구상(안)’ 등에 모두 공통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상에 앞서 1967년 여름, 즉 미-일 양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교섭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을 무렵 이를 민감하게 읽어낸 걸프, 옛소, 카이저, 칼텍스 등의 미국 석유자본이 복귀 후의 일본시장을 타겟으로 일본의 외자법과 석유업법의 규제가 닿지 않는 오키나와에 기정사실을 만들어내려 획책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류큐 정부와 그 브레인인 경제학자들은 오키나와가 가지는 지리적·지형적 우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걸프계 자본이 진출하려 했던 요나구스크(与那城)촌(현 우루마시)의 미야기(宮城) 섬에서도, 칼텍스계 자본이 진출하려 했던 기타나카구스크(北中城)촌에서도, 즉각 지역주민들에 의한 석유 기지 건설 반대 투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토지를 지키는 운동으로 시작된 이 투쟁은, 이윽고 반(反)공해 운동으로 급

7) 오키나와전투 말기에 전멸한 오키나와 육군병원 제3외과 방공호 터에 세워진 위령비. 오키나와 현 이토만(糸満)시에 소재.

속히 기울어갔다. 오키나와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본토에서는 입지가 곤란해진, 고용효과도 낮은 공해 기업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큐 정부는 CTS(석유비축기지) 건설 예정지로 미즈비시 자본(오키나와 미즈비시 개발)에 미야기 섬과 헨자(平安座)섬 사이의 해역 매립에 대한 인가를 내렸다. 이에 73년 9월, CTS에 반대하는 ‘긴(金武)만을 지키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긴만을 지키는 모임의 결성은, 조직 원리 면에서나 그 방향성 면에서나 복귀 후의 오키나와의 새로운 운동의 출발로 주목된다. 종래, 강대한 권력에 대항하는 오키나와의 운동단체는 복귀협이나 혁신 정당,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혁신공투회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라미드 형 조직을 두는 큰 단체가 연합함으로써 가능한 ‘섬 전체’에 가까운 형태로 운동을 추진해가려는 데에 큰 특징이 있었다. 이에 비해 긴만을 지키는 모임은 2명의 간사(아사토 세이신, 사키하라 세이슈)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 개개인에 직접 뿌리를 두는 운동단체였다. 긴만을 지키는 모임에 참여한 것은 대부분이 야라 혁신정권의 탄생에 힘을 쏟고, 그 지지 기반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보수·혁신이 일체가 된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자연과의 공생과 풍요로움의 본질을 재고한다는 관점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생활상을 바꿔가는 데서부터 오키나와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하고 있었다.

가치관의 전환 속에서 새로운 오키나와 상을 찾으려 한 것은, 주민운동뿐만이 아니었다. ‘나고(名護)시 종합계획·기본구상’(1973년)이 제기한 역 격차론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소득 격차론에 대한 생활 역 격차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계적 숫자로 나타나는 명목적인 1인당 소득이 반드시 주민의 생활 실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명목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의 생활 쪽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보다도 훨씬 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입증하면서 그러한 인식 위에 지역사회의 장래를 구상하려는 것이었다.

복귀에 실망한 민중

복귀 후 수년 간 오키나와는 혼돈 속에 있었다.

미군기지를 둘러싼 상황은 복귀전과 비교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 포령·포고와 동일한 공용지법에 의한 토지의 강제 사용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한편으로 군용지료는 대폭 인상되어, 오키나와사회의 모순·대립은 격화되고 있었다. 미군 훈련에 의한 사고나 미군 범죄는 거의 줄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 속에 기지 합리화에 따른 기지 노동자의 대량 해고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달러가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통화 교체는 민중의 일상 생활을 직격하고 있었다.

거기에 본토와의 제도적 일체화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일본적 질서 체계를 실감시켰다. 미군 지배 시절에는 민중의 권리는 제도적으로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지만, 미국이 오키나와의 지배권을 포기할 의사를 굳힌 1960년대 말부터는 민중 투쟁의 고조도 있어 미국 측은 거의 강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자각은 되고 있지 않았으나 1960년대 말부터 복귀에 걸친 기간은 오키나와 민중들이 가장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복귀는, 오키나와의 민중들을 이전까지와는 다른 일본적 질서의 틀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민중들을 애태우고 실망시켰다. 각종 여론조사 상의 숫자는 복귀 직전까지는 겨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했던 민중들이 복귀와 함께 그 현실에 실망해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권말 그림 참조).

그런 가운데, 사회당계 원수협⁸⁾을 중심으로 실탄 포격 훈련 실력 저지 투쟁이 벌어졌다. 또 반전지주들에 의한 공용지법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위헌 공투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소위 전통적 형태의 투쟁과는 별도로, 긴만을 지키는 모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내용의 투쟁도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주민운동과도 연관되면서 기업유치나 관광의존보다는, 제1차 산업이나 전통적 공예품산업으로 지역을 진흥시키려는 ‘섬 부흥(마을 부흥)’ 운동도 대두하게 되었다.

지적 명확화를 둘러싼 공방

8) 原水協 : 원수폭 금지 일본협의회

복귀로부터 정확히 5주년인 1977년 5월 15일을 전후한 며칠 간, 오키나와는 일종의 정치적 흥분 속에 있었다. 5월 15일부터 며칠 동안 수십 곳의 미군기지에 존재하는 3백 수십 명 반전지주들의 토지를 일본 정부가 ‘불법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역 신문들은 1면 톱에 ‘오키나와 기지를 불법 사용’, ‘반전지주, 기지에 침입’이라는 스포츠 신문 수준의 커다란 표제를 달았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복귀 후 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는 군용지주(반전지주)의 토지에 공용지법이라는 그물을 씌워 5년 간 반전지주를 모두 계약하게 하도록 전력을 다했다. 이에 대해 반전지주들이 공용지법 위헌 소송으로 반격에 나 정부의 의도가 좌절되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용지법을 대신할 새로운 기지확보법의 제정을 획책하기 시작했다. 이 때 이용한 것이 지적(토지의 위치·경계)불명확지이다.

오키나와전투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오키나와는 토지의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하는 등기부나 공도⁹⁾류도 거의 소실된 상태였다. 그 때문에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접지주의 입회하에 토지소유권 확인 작업을 실시했으나, 출입조사 등이 불가능했던 군용지를 중심으로 많은 지적 불명확지가 남았다. 그 면적은 오키나와 섬의 9%를 차지했으며, 그 중 82%는 군용지였다.

일본 정부는 복귀와 함께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지적 명확화 작업에 임해야 했다. 오키나와 전투와 군사 점령의 결과 발생한 문제의 처리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지적 불명확지를 반전지주 간 이간질책으로 이용했다.

군용지가 반환되어도 그 지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즉시 개개의 지주(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수 없다. 군용지주의 신고면적(이에 기초해 군용지료가 지불되고 있었다)의 총계와 실측 면적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토지여도 일단 반환되면 즉시 군용지료도 손실 보상금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로 반전지주의 토지에 대해서 감정 섞인 까다로운 반환이 이루어졌다.

안보에 구멍이 뚫린 4일

9) 公圖 : 토지 등기부에 쓰이는 지명·면적 등을 표시하는 지도

오키나와 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적 명확화 작업에 나서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적 명확화법의 법안 요강도 작성하여 제시했다. 공용지법의 기한 종료
가 가까워지자 정부도 지적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작성에 나섰다. 그러나 그것은
몇 가지 점에서 현측의 생각과 크게 달랐다.

첫 번째는, 현이 지적 명확화를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데 대해 정부는 집단 화해(토지 소유자 전원의 합의)방식을 취하려 한 점이였다.

두 번째는, 정부안이 집단 화해 성립에 의해 지적이 명확화될 때까지는 이들
토지를 공용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세 번째는, 국가가 지적 명확화법의 대상지를 공용지로 한정하려 한 점이다.
분명 지적 불명확지의 80%이상은 공용지였으나, 기지 밖에도 그러한 토지는 존
재했다. 그것은 전쟁 직후, 미군이 토지 소유자와 지적을 무시하고 일종의 구획
정리를 실시하고 자신의 토지를 기지로 빼앗긴 사람들에게 할당한 ‘할당 토지’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목적은 지적 명확화 자체보다도, 어디까지나 공용지 확보에 있었
다. 이 때문에 위헌공투 등은 이 법안을 기지확보(신)법안 등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노골적인 구상은 오키나와 현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야당의 반발도
초래했다. 정부는 결국 집단화해 방식은 양보하지 않았으나 대상지를 기지 밖으
로까지 확대하고, 그 대신 야당 측은 지적 명확화법의 부칙에 따라 공용지법의
기한을 5년에서 10년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타협이 성립했다고 전
해졌다.

아사히, 마이니치 등의 전국지에서 오키나와타임스, 류큐신보 등 지역지의 도
쿄관에 이르기까지, 중의원 내각위에서 여야당의 타협이 성립되었다고 보도한
1977년 4월 26일에는, 도쿄의 히비야(日比谷) 야외음악당에서 총평, 사공공 3
당, 시민단체, 도쿄오키나와 현인회 등 약 7000명이 참가해 오키나와 기지 확보
법안 반대 중앙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는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오키나와 문제
에 관한 대규모 집회였다. 위헌공투는 약 150명의 도쿄행동단을 대거 상경시켰
다. 오키나와 현지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야당 측의 막판 저항으로, 5월 15일 이

전에 통과되었어야 할 지적 명확화법(공용지법의 5년 연장을 포함)은 18일이 되어야 겨우 통과되었다. 이리하여 4일 간이었지만 법적 공백 기간이 생겨, 안보에 구멍이 뚫렸던 것이다.

많은 기지에 반전지주들이 들어가 자신들의 토지를 확인했다. 반전지주 중의 한 명인 시마부쿠로 젠유는, 가족들을 트랙터에 태우고 캠프 실즈에 진입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마늘과 염교를 심었다. 이는 일단 토양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데나 기지에서는, 기동대의 벽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반전지주들의 기지 진입을 막았다.

‘안보 보류론’

오키나와에서는 ‘안보에 구멍 뚫린 4일’이 반 기지투쟁의 하나의 기점을 이루는 역사적 체험으로서 오래도록 기억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본토에서는 이미 반 안보 투쟁은 물론, 안보 논의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이른바 록히드 사건이 정치의 초점이 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록히드사가 전 일본공수(全日空)에 대한 항공기 판매를 위해 일본정계에 거액의 공작현금을 뿌려, 이것이 전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의 체포(1976년 7월 27일)로까지 발전한 사건이었다. 76년 12월에 열린 총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대패, 보수계 무소속 8명을 추가 공인해 자민당이 과반수에 겨우 달하는 여야당 백중 상태가 되었다. 여야당의 백중세는, 소수 야당의 ‘불모의 대결’ 노선을 현실주의적인 대화 노선으로 전환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지적 명확화법의 심의 과정이 그것이라고 전국지 등은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혁신 연합 정권 구상도 모색되었다. 그 때 먼저 등장한 것은 ‘오키나와 반환’ 때에 미 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안보·오키나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보 보류론’이었다. 이를 테면, 안보를 부정하는 사회당과 적극 평가하는 민사당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당면한 긴급 정치 과제가 아닌 안보 문제를 제쳐두자는 것이다. 이 무렵 오키나와에서는, 현 원수협을 중심으로 한 현도 104호 너머 실탄 포격훈련 실력 저지 투쟁이 형특별 재판 투쟁으로 한 발 후퇴하게 되는 사태를 맞

고 있었다.

‘안보 보류론’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합종연횡에 몰두하는 정당정치 세계만의 것은 아니었으며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갔다. 예를 들면, 전후 일관되게 평화주의의 오피니언 리더였던 사카모토 요시카즈는 잡지 『세계』 1977년 4월호의 ‘지금 ‘안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그 변화에 따라, 일본의 반 안보 국민운동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선에 점점 합치되어왔다’, ‘그 결과로서 ‘안보’가 현재, 정치적인 쟁점으로서 일시적 긴박성이나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강조점도 원문 그대로)고 말한 바 있다.

확실히 오키나와 반환 후 몇 년 만에 세계 정세는 크게 변화했다. 전후 세계 정치의 틀을 근저에서 전환시킨 미중 접근을 따라가는 형태로 일중 국교 회복이 실현된 것은, 오키나와 반환이 약 4개월 쯤 지연되고 있을 때였다. 중국이, 오키나와의 72년 반환을 결정한 69년 11월의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1973년 1월에는 베트남전쟁이 종결되고, 75년 4월에는 남북베트남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베트남 철군은 어쩔 수 없이 강요당했던 정책 변경이었지 주체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또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은 이른바 오일쇼크를 촉발시켰는데, 이는 석유 전략을 구사한 아랍민족주의의 복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주장하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움직임 등과도 연동하면서 세계 정치 무대에서 제3세계가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PLO가 팔레스타인 대표로서 UN총회에 초청되어(1974년 10월) 옵저버 자격을 부여받은 것도 이러한 상황이 배경이었다. 일본의 ‘아랍 지향의 아랍 외교’가 미국의 중동정책으로부터 자립하는 양상을 띤 것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1968년 8월 남북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미군 사망 사건(관문점 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9월 하코다테(函館)로 망명한 소련의 전투기 미그25의 취급을 둘러싼 미-일 양 정부의 경직된 태도는 동서 대립을 격화시켰다. 그것이 마침내 1978년의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과 ‘배려 예

산' 등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로 발전되었고, 일본 전체의 상황 변화 속에서 고립된 투쟁을 전개해왔던 오키나와도 '안보에 구멍이 뚫린 4일'을 마지막으로 겨울을 맞이하며 혁신 왕국의 해체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야라 현정에서 다이라 현정으로

여기에서, CTS(석유 비축기지) 문제의 흐름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자.

야라 지사는 1974년 1월, 사회정세의 변화에 의한 가치관의 전환을 이유로 CTS 유치 방침을 철회하고, 매립지에 무공해 산업을 입지하도록 기업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오일쇼크 후 CTS 건설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고 본 기업 측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측도 기업 측의 손해 배상 청구와 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방침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할 구체적 조치는 취할 수 없었다. 긴만을 지키는 모임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미 매립지는 완성되어 있었으며, 소송 이익 없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야라 지사는 복귀 후 2번 째 지사 선거에서 다이라 고이치가 당선된 직후(1976년 6월 22일), 미야기 섬-헨자 섬 간 매립지에 CTS를 건설하는 데 대한 허가를 오키나와 석유기지 주식회사에 내렸다. 지사는 자신의 임기 중에 CTS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정을 넘겨주기 직전에 CTS 건설 허가를 내린 것이다. 긴만을 지키는 모임은 행동 착수가 늦어진 점도 있어 매립을 저지하지도, CTS 입지를 저지하지도 못했으나 그 후의 주민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섬 시라호(白帆)의 신 이시가키공항 건설 반대 투쟁 등의 착수가 발 빨랐던 것은, 긴만의 선례에서 배운 바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이라 지사는 미군의 전차도 건설, 실탄 포격 훈련 정지 요청을 위해 상경해 미 대사관에 항의하는 등 반 기지 행정에 적극적이었으나 특히 군전(특조)법안요강을 제기한 것이 주목된다. 군전(특조)법은 군용지의 계획적 반환, 반환지 이용사업의 촉진, 반환지 이용사업 완료까지의 군용지주에 대한 지료 상당액의 보상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기지의 정리·축소·철거를

목표로 하는 현의 자세가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지의 유지·강화를 지상과제로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정부(나하 방위시설국)는 군전법의 제정에는 냉담했지만 지적 명확화 작업에는 열심이었다. 지적 명확화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집단화해 방식에 의한다고 되어있었으나, 미 군용지의 강제 사용을 위해서도 지적 명확화는 필요했다. 공용지법 위헌소송의 제기 등도 있어 공용지법을 재차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기존의 미 군용지특조법(16페이지 참조)을 발동해 강제 사용을 하려면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의 위치·경계가 명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하 방위시설국은 상당히 거칠고 안이한 방법으로 지적 명확화 작업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시마부쿠로 젠유는 ‘내 땅은 밭이 달려서 걸어다니고, 아이도 낳았다’고 말한다. 안보에 구멍이 뚫렸을 때 시마부쿠로가 마늘을 심었던 토지는 다른 사람의 땅이 되었고, 방위시설국은 다른 땅을 시마부쿠로의 토지라고 한다. 또, 한 필의 토지가 제멋대로 두 필로 나뉘지거나 면적이 늘어나기도 했다. 면적이 늘었으니 참으라는 것이 방위시설국의 변이었다.

토지의 위치·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곳은, 각 지주의 소유 면적의 총 면적에 대한 비율로 토지를 배분하고 다다미를 깐 듯한 형태로 토지를 구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변 토지가 모두 확정되면 남은 토지가 그 사람의 토지라고 특정할 수 있다는 등의 논법이 이용되었다.

‘가이드라인’과 ‘배려 예산’

1978년 7월, 구리스 히로오미 통합막료회의(육, 해, 공 3자위대의 막료장으로 구성)의장이 긴급 시에는 자위대의 ‘초 범규적 행동’도 있을 수 있다고 잡지 인터뷰에서 발언하면서 유사입법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었다. 이 발언이 문민통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구리스 의장은 경질되었으나, 이것을 계기로 후쿠다 수상이 방위청에 유사입법과 유사 방위연구의 촉진을 지시하는 등, 문제는 더욱 확대되었다. 11월 27일에 개최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가 일본의 유사시에 자위대와 미군이 실시하는 공동대처행동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

침'을 결정한 것은, 일련의 유사입법 논의와도 관련된 미-일 군사 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발로였다. 가네마루 신 방위청장관이 지위협정 제24조에서,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 경비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힘든 미국 측의 입장을 배려해' 일본 측이 대신한다고 밝힌 이른바 '배려 예산'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 자리했었을 것이다.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과 '배려 예산'은 구 안보조약의 성립, 60년 안보개정, 오키나와 반환, 그리고 후의 안보 재정의와 같은 강렬한 인상은 주지 못했으나 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 안보의 변질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의 기점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도, 본토와의 제도적 일체화와 조직적 중앙계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귀 전부터 이어져온 투쟁의 남은 불씨를 되살리며 계속되어 온 실탄 포격훈련 실력저지 투쟁으로 대표되는 투쟁도, '안보에 구멍 뚫린 4일'의 투쟁을 마지막으로 퇴조기에 접어든다. 그리고 그것은 병으로 사임해야 했던 다이로 지사의 후임을 선출하는 78년 12월의 지사 선거에서 안보를 긍정하는 니시메 준지가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지사 선거에 앞서 실시된 교통 방법의 변경과 전군노(전 오키나와군 노동조합)와 전주로(전 주류군 노동조합, 본토의 기지노동자 조합)의 조직 통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적 일체화와 조직적 계열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사람은 오른쪽, 차는 왼쪽'

1978년 7월 30일 오전 6시를 기해, 오키나와의 교통 방식은 미군 지배 시절부터 삼십 여 년 간 익숙해 있던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에서, 본토와 같은 '사람은 오른쪽, 차는 왼쪽'으로 바뀌었다. 교통방식변경의 첫 번째 이유는, 일본도 비준한 '도로 교통에 관한 조약'에 1국 1교통 방식의 원칙이 규정된 데에 있었다. 그러나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으로서, 미국 내에도 교통 방식이 다른 지역(섬)이 존재한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복귀 후 오키나와와 본토 간의 왕래가 늘면서 '연간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통 방식의 차이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이유가 성립한다면, 오키나와와 본토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몇 배에 달하는 해외 여행자들 역시 교통상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얘기가 된다. 세계 백 수십에 이르는 국가 중 일본과 같은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는 영국과 그 옛 식민지 등 겨우 10여 개 국에 불과하며 90% 이상의 국가에서는 일본과 반대, 즉 당시 오키나와와 같은 교통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 방식의 차이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일본이 세계의 대세에 따르는 방향으로 교통 방식을 변경해야 했을 것이다.

즉, 73년 9월의 각의에서 결정된 교통 방식 변경의 이유는 모두 나중에 갖다 붙인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오키나와의 교통 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오키나와로 복귀한 이상 모든 제도를 본토와 일체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 있었다.

오키나와에서도 당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은 높았으나 '730'(7월 30일)이라 불리는 교통 방식 변경일이 가까워지면서 일상 속의 구체적 문제들을 통한 민중의 불만과 불안이 한꺼번에 분출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이런 것까지 획일화, 일체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서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현청 직원이 어느 샌가 정부 관계기관을 '본성' 등으로 극히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 데 대한 민중의 위화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730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불안은 정치적인 힘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민중들에게 본토와의 제도적 일체화의 완성을 크게 실감시키게 되었다.

정당, 노조, 운동의 '일체화'

전후 오키나와의 정당, 노조, 각종 단체 등은 미군 지배 시절부터 스스로 본토 제조직과의 연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정당들 가운데, 1958년에 결성된 오키나와사회당은 입당 선언에서 '조국 복귀가 실현되면, 전원 일본사회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듬해인 59년에 결성된 오키나와자민당은 '실질적으로 일본자민당 오키나와 현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1947년에 결성된 오키나와인민당은 50년대 중반부터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를 심화하면서도 독자 정당으로서의 길을 걸었으나, 73년 10월 일본공산당과의 합류를 결정했다.

1950년에 결성된 오키나와사회대중당(사대당)만이 독자적 지역 정당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대당은 결성당초부터 스스로의 성격을 복귀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복귀에 즈음해서는 복귀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온 과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았으며 남겨진 과제에 임하기 위한 독자 정당으로 존속할 것을 결정한 것이었다.

평화단체들을 살펴보면, 1958년 8월에 결성된 오키나와 현 원수협은 일본의 원수금 운동 분열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아 분열되나, 오키나와에서는 원수금 계열이 현 원수협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협계가 동일한 명칭의 조직을 별도로 조직함으로써 2개의 현 원수협이 양립하는 복잡한 상태가 발생했다.

오키나와의 독자적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노조 등도, 복귀에 따라 조직적 계열화를 완성시켰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 전체¹⁰⁾는 복귀에 따른 조직적 개편으로 전체와 전전통¹¹⁾으로 나뉘어, 그 때까지 동일 조직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공동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졌다. 파업 등의 투쟁지령도 도쿄의 본부에서 내려지게 되었다. 관공노¹²⁾도, 정부 직원과 현 직원으로 나뉘어 각각 계열화되었다. 조직의 지도권이 중앙으로 흡수될 뿐 아니라, 직접 대치하는 상대방도 당사자 능력을 잃고 많은 문제의 최종적 처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도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현지의 투쟁은 공동화되었다. 오키나와가 직면한 과제를 맡은 지역 공투가(형태상으로는 가능해도)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이런 사정에 의한 부분도 있었다.

‘전군노(全軍勞)’의 이름이 사라지다

조직적 계열화로부터 홀로 남겨진 것이 전군노였다.

전군노가 결성된 것은 1963년이다. 무권리 상태로 기지에서 일하고 있던 오키나와의 기지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비합법 활동을 거쳐 겨우 기지 안에 작은 노

10) 全遞 : 전 체신 노동조합

11) 全電通 : 전국전기통신 노동조합

12) 官公勞 : 일본관공청 노동조합 협의회

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15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들 연합체로서 전군노련이 결성된 것이 1961년, 그것이 단일조직 '전군노'로 이행한 것이 1963년이었다.

오키나와의 기지 노동자들은 미군 직접고용의 신분에서 적어도 본토처럼 일본 정부에 의한 간접고용으로 바뀌기를, 그리고 미군의 노동포령에 의한 숙박에서 벗어나 일본의 노동법 보호를 받기를 갈망했다. 거기에 기지 노동자로서의 복귀의 의미가 있었다. 그를 위해서도 전군노는 하루라도 빨리 본토의 전주로와 합체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1968년부터 70년에 걸쳐 사정은 일변했다. 1968년 4월 24일, 23년간의 굴욕을 견뎌온 기지노동자들의 분노가 베트남전쟁 반대와 B52 철거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폭발했다. 이 날 전군노는, 쟁의권은커녕 단체교섭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노동포령의 철폐를 요구하며 10%연휴 투쟁(사실상의 24시간 파업)을 결행해 사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미군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전군노의 조합원은 약 18,000명, 투쟁(휴가) 참가자는 비 조합원을 포함해 23,000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미 서술한 것처럼, 사토-니슨 공동성명(69년 11월) 직후부터 기지 합리화를 위한 노동자 대량 해고가 개시되었다. 이 대량 해고는 미국의 세계적인 기지재편 합리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키나와뿐 아니라 일본 본토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기지 노동자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큰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은 전주로와 전군노에 구체적인 공투의 장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충분한 공투 체제는 성립되지 않았다. 전군노가 48시간 파업에 이어 23시간 파업을 벌이며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전주로는 단 하루 파업이라는 호응도 할 수 없었다. 1970년 초의 이 투쟁은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로와, '해고하려면 기지도 돌려달라'며 해고 철회 투쟁과 기지 철거 투쟁을 연계시키게 된 전군노와의 체질적 차이를 부각시켰다. 이 무렵부터 전군노와 전주로의 조직 통일의 기운은 급속히 사그라들어 갔다.

복귀 후 오키나와 기지 노동자의 신분은 일본 정부의 간접 고용이 되었으나, 전군노는 투쟁으로 노동포령을 공동화시키면서 부분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조합

활동 등에 관해 본토 수준 이상의 제권리를 획득하고 있음도 알려졌다. 또 복귀에 의해 직접 대치하는 미군에게 당사자 능력이 없어지면서 투쟁 효과를 올리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귀 후에도 기지 노동자의 단속적 해고는 계속되었고, 전군노의 조합원들도 피크 때의 2만 명에서 5천 명 정도로 감소했다. 전주로와 전군노의 합병은 전군노의 투쟁력 쇠퇴를 하나의 조건으로 다시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섬 전체의 싸움과 불안 속에서 실시된 교통 방식의 '일체화'와는 대조적으로 1978년 9월 2일,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로부터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전주로와 전군노의 조직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 날,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걸쳐 오키나와 투쟁의 견인차라고도 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전군노'의 이름이 사라졌다.

이렇게 안보를 용인하는 니시메 지사의 등장이 준비되어 갔다. 지사 선거에 앞서 각 시 수장들의 보수 대 혁신의 비율도 달라지고 있었다. 1980년 6월의 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혁신과 보수의 의석수가 역전되면서 보수화 경향은 한층 깊어져 갔다.

제3장 불태워진 ‘히노마루’

훈련 격화와 가데나(嘉手納) 폭음소송

니시메 보수현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1979년 8월, 약 2주에 걸쳐 오키나와 섬과 주변 해역에서 미 제7함대와 제3해병 수륙양용차에 의한 합동 상륙 훈련이 실시되었다. 약 4만 명의 대원이 참가한, 주일 미군으로서는 최대의 군사 훈련이었으며 자위대도 참가했다. 이는 전해에 책정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에 따른 훈련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듬해인 80년 1월에는 자위대 나하 기지에서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6월에는 F104 전투기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잇따른 이들 사고는 활발해진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81년 9월에도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첫 대규모 미-일 합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군사 훈련을 비롯해 활발해진 군사 행동은 필연적으로 소음 등 기지 피해의 확대를 초래한다. 복귀 10주년이었던 1982년 2월, 가데나 기지 주변의 주민 601명이 야간 비행의 정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가데나 기지 폭음 소송을 제소한 것도 보수현정 하에서 거칠 것 없이 활발해진 미군 훈련에 대한 주민 측 반응의 하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 후 원고 주민은 907명으로 늘었다.

미군기지의 소음 문제는 요코타 기지(도쿄)나 아즈기(厚木) 기지(가나가와(神奈川) 현)와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가데나 기지에 대해서 요코타나 아즈기에 준하는 야간 비행 등의 제한이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은 1996년이 된 후의 일이다. 이러한 차별적 취급은 가데나 기지와 그에 연동하는 기타 오키나와 기지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해 약간의 제약도 받고 싶어하지 않는 미군 측의 의향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향 존중이 합치된 결과였다. 거기에다 ‘미군의 운용상의 소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실제로는 이른 아침·심야의 비행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부활한 미 군용지특조법

한편 세계 정세로 눈을 돌리면, 79년 말 아프가니스탄의 쿠데타에 소련이 개입하면서 발생한 제2차 냉전이라 불리는 긴장상태는 미·일·중 등의 80년 7월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으로 이어졌다. 이웃의 한국에서는 79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고, 이듬해인 80년 5월에 광주 민주 항쟁이 일어나 80년 8월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했다. 중동에서는 79년 1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으며, 이듬해인 80년 4월 미국은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에 실패하는데 이 때 출동한 것이 주 오키나와 미군이었다고 한다. 이 무렵부터 나하 군항에는 이전까지의 녹색으로 위장한 미군 전차를 비롯한 군용차량을 대신해 사막 전용의 갈색으로 위장한 각종 군용 차량이 늘어지게 된다. 주 오키나와 미군의 참전지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아시아 각국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80년 9월에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82년 6월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팔레스타인 정세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한편, 1977년 5월로 기한이 5년 연장된 공용지법의 기한 마감인 1982년 5월 14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미 공용지법 위헌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오키나와에만 적용되는 명백히 위헌 소지가 짙은 특별법을 재차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정부는, 공용지법의 기한마감 이후에는 다치카와 기지의 확장에도 사용된 바 있는 미 군용지특조법을 오키나와에서의 미 군용지 강제 사용에 발동하기로 했다. 이미 1960년대에는 본토에서는 미 군용지특조법을 발동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였으며, 1962년 사가미하라(相模原) 주택지구(가나가와 현)를 마지막으로 이 법률은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동면 상태에 있었던 미 군용지특조법이 20년이 지나 오키나와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었다. 보수 현정의 탄생은 일본 정부의 미 군용지 강제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강제 사용 절차의 5단계

미 군용지등 특조법에 의하면, 미 군용지의 강제 사용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①먼저, 내각 총리대신이, 강제 사용할 토지의 ‘사용 인정’을 한다.

②다음으로, 기업자(여기에서는 나하 방위시설국장)가 대상지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이 토지조서·물건조서에 토지 소유자의 서명 날인을 요구한다. 토지 소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대상토지 소재의 시정촌장에 서명날인의 대행(대리서명)을 요구하고, 시정촌장이 거부할 경우에는 지사의 행을 요구한다.

③토지조서·물건조서가 완성되면, 기업자는 현 수용위원회에 대해 재결신청을 한다.

수용위원회는 대상토지 소재의 시정촌장에 관계 서류를 관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한 공고·종람을 요구하고, 시정촌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사에게 그 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고·종람이 끝나면, 현 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 소유자 쌍방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는 ‘공개심리’를 실시한다.

⑤현 수용위원회는 이 공개심리의 결과 등을 감안해 재결을 한다.

현 수용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사부국과는 독립된 기관이었다. 위원은 몇 명씩, 3년 임기로 지사가 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혁신 현정 시절에는 공용지법에 의한 강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현 수용위원회나 지사, 시정촌장 모두 미 군용지 강제 사용 절차에 관여하는 일은 없었으나, 그럼에도 손실 보상금의 산정 문제에 대해 반전지주의 이의 제기를 현 수용위원회가 받아들이자 국가가 이에 불복해 재판을 여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80년 6월의 현의원 선거에서, 현의회에서도 자민당과 보수계 무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현 수용위원회 구성원들도 서서히 보수색을 강하게 띠어 갔다.

‘5년간의 강제 사용’이라는 재결

1980년 1월 나하 방위시설국은 미 군용지특조법에 의한 미 계약 미 군용지의 강제 사용 절차에 착수했고, 81년 1월에는 총리대신 스즈키 젠코가 약 150명의 반전지주의 토지에 대해 ‘사용인정’①을 했다. 3월 20일에는 나하 방위시설국장이 현 수용위원회에 대해 5년간의 강제 사용 재결신청(③)을 했다.

81년 8월 4일부터 82년 2월 27일까지 6회의 공개심리(④)가 열려, 4월 1일 현 수용위원회는 나하 방위시설국장의 신청대로 5년간의 강제 수용을 인정하는 재결(⑤)을 내렸다.

대리서명(②)이건 공고·중립대행(③)이건 니시메 지사가 당연한 듯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젯거리도 되지 않았다. 공개심리에는 위헌공투에 가입한 각 조직의 멤버들이 지원·방청을 했으나 참가자는 결코 많지 않았다. 18단체로 구성된 위헌공투의 방청자가 3, 40명 정도일 때는 버스로 동원된 시설국 직원 쪽이 많은 경우도 있었다. 거기에는 대중운동 전반의 정체와 운동 조직의 무력화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 재결로 반전지주들은 그 때까지 입어온 것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강제 사용 기간 5년분의 손실 보상금이 일괄 선지불되고, 선지불에 따른 5년간의 ‘금리분’이 ‘중간이자’로 차감되어 실질 4.3295년분 밖에 선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5년간의 강제 사용을 강요당한 반전지주들은, 일괄 선지불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 누진과세방식으로 거액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같은 5년간의 강제 사용 일지라도 군 용지료에 알맞은 손실보상금이 매년 산정되어 지불된 공용지법과 재결시점에서 평가를 고정하고 일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불하는 미 군용지특조법이 토지 소유자에게 끼친 경제적 영향 - 특히 눈부신 경제성장이 계속되었던 80년대 - 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1평 반전지주 운동의 발족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100명이 넘는 반전지주들이 남아있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반전지주의 입장이나 태도는 가지각색이다. 흔들림 없는 신념을 바탕으로 반전운동을 즐기는 듯 보이는 사람, 갖은 수단을 동원한 계약 강요를 태연자약하게 흘려넘기고 조용히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사람, 동요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경제적 차별과 사회적 박해를 견디는 사람……. 그들을 지탱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 중과 전후의 역사적 체험이었다.

오키나와의 양심이라 할 수 있는 반전지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실감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뜻하지 않게 계약으로 내몰려 좌절감을 맛보는 지주들에게까지 연대의 폭을 넓히면서 다시금 민간차원에서 반전·반 기지투쟁을 재구축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1평 반전지주 운동이 발족되었다.

1평 반전지주 운동은, 구체적으로는 가테나 공군기지 내에 있는 당시의 반전지주회 회장 히라야스 즈네지의 토지 일부를 1인 당 만 엔 씩 각출해 구입, 지분등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1평 반전지주 운동이 발족한 것은 복귀로부터 10년이 흐른 1982년 6월, 즉 미 군용지특조법에 의한 5년간의 강제 사용이 개시된 다음 달의 일이었다.

이 운동은 당초, 운동 참가자를 류큐호(류큐문화권)¹³⁾재주자 및 그 출신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되찾은 군용지를 ‘생활과 생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자가 참가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매우 안이하게도 오키나와와 본토 간 연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는 조국복귀 운동, 오키나와 반환 운동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거기에는 우선 자신들의 주변부터 다져나가자는 이른바 자력갱생 사상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 오키나와에서의 움직임과는 개별적으로 간사이(關西) 지방에서도 히라야스 즈네지의 다른 토지를 구입하고, 오키나와의 반전지주들과 연대하는 ‘간사이 반전 1평모임’ 결성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었다. 또 오키나와의 1평 반전지주 운동에 대해서도, 복귀 전부터 오키나와와 관계를 가져온 현외 거주자들로부터 운동 참가자 한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적극적인 참가 신청이 있었다. 이에 1평 운동의 발기인들은 검토를 거듭한 결과, 류큐호 이외의 거주자도 오키나와

13) 62페이지 참조.

와 반전에 대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강한 의사를 가진 이의 참가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이 운동에 대한 반향은 뜻밖에도 컸다. 1평 공유화 운동에 대한 참가 희망자는 노동 운동과 주민·시민운동에 관련된 사람 뿐 아니라, 그 동안 이러한 운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였던 사람들 사이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 ‘히메유리 학도대’의 인솔 교원이었던 나카소네 세이젠(류큐대학 명예교수), 신문기자로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도요히라 료켄(전 오키나와타임스 사장), 현역은퇴 때 사재를 털어 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한 ‘우루마 학술연구 조성기금’을 창설한 의사 겐카 조메이, 전 육군병원 간호사 구시 야에 등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제자와 동료, 부모형제와 어린 자녀를 전쟁 중에 잃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현외의 참가자로는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단장 후쿠모토 류조 등이 있었다. 그 해 12월, ‘군용지를 생활과 생산의 장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83명의 1평 반전지주들에 의해 1평 반전지주회 결성총회가 열렸다.

북귀협에서 위헌공투에 이르는 전통적인 오키나와의 대중운동의 특징은 폭 넓은 단체공투를 기초로 섬 전체 투쟁을 지향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1평 반전지주 운동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있었으며 활동의 중심은 지역별, 직업별 블록이었다. 1평 반전지주 운동의 스타일은 긴만을 지키는 모임과 그 지원단체인 CTS 저지 투쟁을 확대하는 모임(후의 류큐호의 주민운동을 확대하는 모임), 반(反)CTS 노동자 연학회 등,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주민·시민운동의 흐름을 계승한 북귀 후의 새로운 운동 형태였다.

변화하는 자위대관

보수현정의 본격적 출범으로, 자위대와의 관계도 크게 바뀌게 된다. 현의회에서도 혁신-보수가 역전된 80년 12월, 현은 의회에 처음으로 자위관 모집 업무비를 계상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채택에 대해서는 현경기동대가 출동하는 소동으로까지 발전했으나 결국 찬성다수로 가결되었다. 나하시 등의 혁신 지자체는 그 후에도 국가의 기관 이임 사무인 자위관 모집 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민중

의 의식은 70년대 후반에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자위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권말그림 참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자위대 기지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기지를 기지 기능과 함께 이어받은 것이 대부분이며 그 존재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자위대 기지는 복귀 30년 후인 2002년 3월말 현재 약 637 헥타르, 미군기지의 1/30 이하로, 면적비율로 보면 전국 자위대 기지의 0.6%, 즉 이것만 놓고 본다면 ‘본토 수준’이다(그러나 복귀 당시와 비교하면 복귀 5년 후 2배, 20년 후 4배로 늘어났다). 또 자위대원이 제복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일도 의식적으로 피해왔다. 자위대원의 제복차림이 공공연해진 것은 복귀 후 30년 가까이 흐른 90년대 말부터이다.

둘째, 자위대는 주민들의 반 자위대 감정을 고려해 불발탄 처리와 응급 수송 등의 민생 협력 활동에 특히 힘을 쏟는 한편,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기지 내 항공교실이나 항공기 체험탑승, 봉오도리¹⁴⁾, 주둔지 개설기념행사에 대한 시민초대 등 폭넓은 선무공작을 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전투 당시의 불발탄이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나도 여전히 건설 공사 현장 등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1974년 3월에는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불발탄이 폭발해 유치원생 4명이 즉사, 20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불발탄 처리 작업은 자위대 이외에는 불가능해 주변 섬의 응급 수송과 함께 자위대 필요론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는 호헌 반안보 현민회의(1993년에 원수금계 원수협과 합병해 오키나와 평화운동센터가 됨) 등이 중심이 되어, 자위관의 성인식 참가 반대 행동이 장기간에 걸쳐 연중행사화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자위대의 존재도 어쩔 수 없다는 견해가 여론조사상의 숫자로는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뿌리 깊은 반 자위대 감정이 잠재하며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 표면화한다는 상황이 있었다. 1982년 12월, 반자위대 감정을 누그러뜨렸다고 자신하던 일본 정부가 자위대 배치와 나하 방위시설국 개국 10주년 퍼레이드를 열었다가

14)일본의 명절인 '오봉'기간에 추는 춤

반대행동에 의해 퍼레이드를 중단당한 것이 그 한 예였다(‘이의있음! 자위대·전쟁으로의 길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에서 매년 1월 자위대 문제를 폭 넓게 생각하는 심포지엄과 집회를 개최하고, 2005년에는 자위대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6세 미만의 ‘전투 협력자’란

한편 1979년 12월, ‘오키나와 현 전재상해자의 모임(6세미만)’이라는 모임이 발족되었다. 이는 오키나와전투 당시 6세 미만이었던 전상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왜 6세 미만인 것일까.

일본에는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이하 ‘원호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것은 대일 평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제정된 것으로, 군인·군속, 바꿔 말하면 국가와 고용 관계에 있었던 전투 종사자 또는 전투 협력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여 연금과 조위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전쟁 희생자를 원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법률은 제정된 이듬해인 1953년부터 오키나와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상전이 벌어진 오키나와에서는, 군인·군속이외에도 탄환 운반이나 부상자 간호 등을 해야만 했던 민간인이 다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전투에 협력했다는 명목이 서는 한 원호법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세 이상이면 전투 협력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6세 미만의 나이에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즉 전혀 전투 (협력)능력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오키나와만 특별 취급할 수 없다’, ‘오키나와전투의 희생자에 대한 원호 대상을 비 전투원으로까지 확대하면, 공습에 의한 전쟁 상해자에 대해서도 원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진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논리가, 공습 희생자까지 대상으로 한 전시재해원호법의 제정과 원폭피폭자 원호법의 제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기에 전쟁으로 손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큰 상흔이 남은 사람들 중에는 외

부로 나가는 것을 꺼려 학교에도 가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 전후 삼십 몇 년이 지나자 이 사람들을 돌봐온 근친들도 나이가 들어 보호 능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들, 그녀들 자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모임이 발족한 지 약 1년 반 후(1981년 8월), 정부는 만 6세 미만의 전상병자 및 전몰자 유족에 대해 원호법의 적용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 사람들을 전쟁 희생자로 인정해 원호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만 6세 미만에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전투 협력자로 인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만 6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어떤 전투 협력이 가능했을까.

원호법 적용을 신청한 사람들의 전투 협력 내용은 대부분이 ‘방공호 제공’과 ‘식량과 물의 제공’이었다. 사실상 일본군에 의해 피난 동굴에서 쫓겨나 식량과 물을 빼앗긴 것이 ‘전투 협력’인 것이다. 덧붙여두자면, 게라마(慶良間) 제도에서의 집단 ‘자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초부터 영유아에게도 원호법이 적용되었다. 자마미촌 유족회의 원호법 적용 신청서(1961년)에 의하면, 집단 ‘자결’의 목적은 ‘주민의 자결로 절박해진 식량을 군에 제공함으로써 전투 협력의 의사표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유아가 ‘자결’하는 일이 있을까.

비슷한 시기(1982년 6월), 문부성의 검정에 의해 고교교과서의 역사기술이(‘침략’을 ‘진출’로 기술하는 등) 바뀐 문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오키나와에서도 일본군에 의한 주민학살 사실이 근거가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된 문제에 대해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오키나와타임스와 류큐신보는 사실의 추적과 그 의미의 검증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오키나와는 전후 수십 년이 지나도 전쟁의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터져나왔던 것이다.

‘복귀해서 다행’이었나

그러나 복귀 10주년을 맞이할 무렵부터 여론조사상의 숫자 등에 나타난 민중의 의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복귀 10주년을 기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복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웃돌고 있었다(권말 그림 참조).

여기에서 보이는 숫자 변화의 배후에는, 다수의 오키나와 민중들이 야마토¹⁵⁾사회와 야마토적인 제도에 '익숙해졌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복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도로, 항만, 공항, 학교 등의 여러 시설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졌고, 현민 소득은 여전히 전국 최저이긴 했으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복귀 당시와 비교하면 훨씬 향상되어 있었다. 정부는 1981년 12월, 오키나와 특례의 고율 국고 보조 제도의 계속을 결정하고, 82년 8월에 제2차 오키나와 진흥 개발 계획(2차 진계)을 책정했다.

그러나 공공 투자에 의존한 개발이 2차 진계에서도 제시한 오키나와 경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1차 진계의 결과가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또 본토와 오키나와의 소득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내의 지역 간 격차 및 계층 간 격차는 오히려 증대되고 있었다. 거기에 오키나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인 군사기지의 증압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위헌공투와 2개의 원수협, 호헌 반 안보 현민회의 등은 끈질기게 반 기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일본전체의 탈 핵신화 현상과 오키나와의 본토로의 조직적 계열화 속에서 고립화와 무력화가 더해지면서 조직의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개인에 뿌리를 두는 다양한 주민·시민운동도 확대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기존의 운동을 대체할 만하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역량은 지니지 못했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기에 걸친 오키나와 민중의 의식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화하면서 일상으로 회귀하는 다수파와 폐색적 상황의 타개를 모색하는 자각적 소수파의 갈림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반(反)복귀·반(反)야마토

보수 현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1979년은, 묘하게도 메이지 정부에 의한 류큐 처분으로부터 정확히 100년째 되는 해였다. 1879(메이지12)년 3월 27일, 류큐 처분관 마츠다 미치유키는 류큐번의 폐지와 오키나와 현의 설치, 구 번왕이 3월

15) 大和 : 오키나와에서 본토를 지칭하는 말.

31일까지 슈리성에서 퇴거할 것 등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100년 후인 1979년 3월 27일, 나하에서는 연구자, 목사, 저널리스트 등 약 10명이 발기인이 되어 ‘류큐 처분을 생각하는 강연집회’가 개최되었다. 조직적 차원의 홍보는 전혀 없었으나, 신문의 문화 단신란 등을 보고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가했다.

야마토와 다른 독자적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자라난 개성적인 문화를 보유한 오키나와에서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그 역사적·문화적 독자성을 바탕으로 오키나와 사회의 장래를 전망하려는 전통이 있다. 패전 직후, 전쟁 전의 치안유지법에 탄압받은 체험이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독립론’(적 사고)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지배자인 점령 미군을 ‘해방군’으로 오인하기도 해, 곧 ‘평화헌법 체제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일본 복귀 운동의 격류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리고 72년 오키나와 반환 정책이 ‘평화헌법 체제로의 복귀’는커녕, 미-일 군사동맹 재편 강화의 일환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1970년 무렵이 되자 ‘반 복귀론’이 대두하기 시작한다. 반 복귀론은, 일본의 오키나와 지배를 내부에서 떠받쳐온 오키나와인 자신 안에 있는 야마토 지향성을 버림으로써 일본 국가와 근저에서 대결할 것을 주장했으나, 반 복귀론이 반 복귀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독자적 사회 구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귀 후의 제도적 본토일체화·조직적 계열화의 격류는 광범위한 민중의 반발, 이른바 반 야마토 감정을 낳았고 그것이 복귀 후 얼마간 뿌리 깊었던 복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도착과’지사 다이로 고이치가, 반 기지 행정과 제도적 일체화의 사이에 끼면서 1977년의 연초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올해를 문화입현의 첫걸음으로 만들어나가자’라고 제창한 것은, 그러한 민중심리와 어딘가 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문화의 정치화(독자문화를 정치적인 힘으로 바꿈)보다도, 정치로부터의 도피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보다 전에, 1976년 1월, CTS 저지 투쟁을 확대하는 모임은 각 섬의 주민운동의 네트워크 마련을 목표로 간담회 ‘류큐호의 주민운동’을 개최했다. 류큐호란, 행정적으로는 가고시마 현 오시마군(아마미제도)을 포함하는 류큐 문화권을 일컫

는 말로, 사츠마 번에 의한 류큐 침략 이전의 류큐왕국의 판도를 가리킨다. 아마미의 섬들에서도 이 시기에 CTS와 석유 정제 시설,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 등의 계획 등이 세워지고 있었다. ‘류큐호의 주민운동’은, 당면한 과제인 주민운동 네트워크 마련을 독자문화권과 오버랩시켜 그것을 의지처의 하나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 미군 지배 시절의 복귀 운동이 아마미와 오키나와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류큐 처분을 생각하는 강연 집회’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다.

국제적 군사화의 조류 속에서

복귀 10주년(1982년)에서 15주년에 이르는 1980년대 중반의 서방 세계는, 이른바 대처(영), 레이건(미), 나카소네(일)의 시대였다. 작은 정부와 민간 활력을 표방하며 재정 면에서 복지 정책과 사회 보장에 엄격한 정책을 취하는 한편, 소련에 대한 강경 자세를 비롯해 군사력에 중점을 둔 대외 정책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이웃의 한국도 전두환 정권 시대였다.

나카소네 수상은, 개각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듬해 83년 1월,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을 방문하고 그 며칠 후에는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일 운명공동체론을 전개, 일본은 대 소련방위의 ‘불침항모’라고 밝혔다. 사할린 상공의 소련 영토를 침범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이 일어난 것은, 83년 9월. 미 해병대가 아마미 오시마의 절반만한 카리브해의 소국 그라나다의 정권을 짓밟은 것은 같은 해 10월의 일이다. 다음 달인 11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다음해인 84년 9월에는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방일했다.

이 시기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군사적 움직임으로는, 주 오키나와 미 해병대와 제7함대에 의한 대규모 상륙 훈련에 자위대가 참가하거나(83년 6월), 미 태평양 공군이 나하 공항의 민간기 이착륙을 규제하고 대규모 항공기 전투 훈련을 실시(85년 11월)한 것 등이 주목할 만한데, 주 오키나와 미 해병대는 홋카이도에서도 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84년 10~11월, 85년 2월).

베트남전쟁 종결로 일단 오키나와에서 철수했던 미 육군 특수부대(그린베레)도 84년 10월에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와 요미탄 보조 비행장에서 빈번하게 낙하산 강하훈련을 반복했다. 85년 3월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배치된 전화포를 핵폭탄 발사 가능한 M198형 유탄포로 전환, 포병대를 증강한다고 발표했으며 현도 104호 너머 실탄포격훈련에서도 M198형 유탄포가 사용되었다.

미군의 훈련(항공기의 초저공비행 등)때문에 중학교 수업이 중단되거나 자위대 기 사고로 나하 공항이 폐쇄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1985년은 세계 정치상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된 해였는데 일본에서는 같은 해 8월 15일, 나카소네 수상과 각료 전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해 아시아 각국·각 지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소리 높여 주장한 나카소네 수상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내딛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해 6월의 임교심(임시교육 심의회)은,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제1차 답신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듯, 오키나와에서는 니시메 지사가 천황의 해방국체(오키나와 국체) 참가로 ‘오키나와의 전후는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었다.

이렇게, 1987년 가을의 해방국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과 해방국체(海邦國體)

제42회 국체(국민체육대회)를 1987년에 오키나와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된 것은 1980년 1월의 일이었다. 각 현이 돌아가며 치르는 국체의 첫 최종 개최현이 오키나와가 된 것 자체에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으나, 해방국체가 열리는 1987년은 복귀 15주년에 해당하는 해였다. 따라서 해방국체는 복귀 15주년 기념사업으로서의 의미도 부여받고 있었다. 그리고 국체에는 천황의 개회식 참가, ‘히노마루’ 계양, ‘기미가요’ 제창, 자위대 협력 등이 당연한 듯이 수반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국체가 다가옴에 따라 ‘오키나와의 역사적 체험을 고려한 자발적인 국체를’ 이라는 주장과, 앞서 개최했던 다른 모든 현들이 했던 것처럼, 즉 ‘본토 수준’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국면에서 부딪치게 되었다. 개최현이 반드시 우승한다는 조작 하에 치러지는 스포츠대회인 국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런 의견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키나와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국체’의 경우, 특히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천황(제) 문제와 ‘히노마루’, ‘기미가요’ 문제였다.

잘 알려진 대로, 패전 이듬해인 1946년 1월의 천황의 이른바 인간선언 이래 1946년부터 1954년 사이의 전국 각현 순행으로 상징천황제에 대한 탄탄한 심정적 지지기반이 다져져 있었다. 그러나 미군 지배 하의 오키나와에는 천황도 받을 들일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복귀를 전후해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당시의 야라 조보 류큐정부 주석(후의 오키나와 현 지사)도 내심 자신의 재임 중에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을 실현시키고 싶어 했다고 한다. 복귀 전년인 1971년 6월 4일자 요미우리 신문이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결정을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쇼와 천황은 1921(다이쇼 10년)년, 황태자시절의 유럽여행 도중 오키나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야라 조보는 오키나와 사범학교 학생, 천황이 타고 있었던 '가토리'의 함장은 오키나와 출신의 간나 겐와 해군대령이었다.

오키나와 민중의 천황관

그러면 오키나와의 일반 민중들은 어떤 천황관, 황실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요미우리 신문이 1970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략 67%가 황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복귀 시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은 실현되지 않았다. 반대운동이 벌어지지도 않은 것을 보면, 일본 정부와 천황측근에게는 복귀 직후의 소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으로 천황의 등을 떠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후 오키나와의 민중의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복귀에 대한 기대는 복귀에 대

한 부정적 평가로 바뀌어 갔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황태자를 해양박람회 명예총재로 오키나와에 보냈으나, 히메유리탑에서 화염병을 투척당하는 결과를 맞았다(1975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78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오키나와에서는 마침 730문제(47~48페이지 참조)가 부각되고 있을 무렵, NHK가 전국 현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거기에 ‘천황은 존경해야 할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항목이 있다. 전국 평균은 ‘그렇게 생각한다’가 55.7%,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25.1%였다. 이에 비해 오키나와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35.7%,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37.1%였다.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웃돈 곳은 오키나와뿐이었다.

1970년 8월의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와 78년의 NHK조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70년의 요미우리신문 조사 시점에서는 황실에 대한 친근감이나 경애심이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히노마루’와 달리, 복귀운동이 활발했던 무렵의 오키나와에서도 ‘기미가요’가 적극적으로 불리거나 천황과 천황제가 문제의식의 대상이 되는 일은 거의 없었으나, 장밋빛 일본(냉랭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미군지배하의 오키나와의 상황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일본)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평화헌법’에 규정된 상징천황에 대한 일정한 친근감과 경애감은 존재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78년의 NHK조사 결과는 78년이라는 시점의 시대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10년, 1987년 2월에 NHK가 실시한 오키나와 주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천황은 존경해야 할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44.5%가 ‘그렇게 생각한다’, 29.5%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이다. 같은 시점에서 직접 비교대조할 수 있는 타 부현의 조사는 없다. 일본 전체가 이 10년 동안에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키나와 민중의 천황관도 야마토를 뒤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강화된 관리체제

한편 천황의 해방국체 참가는 일본 정부에게 지상과제였다. 전후 42년, 복귀 후 15년이 지나도 쇼와 천황은 오키나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다. 천황의 연령으로 보나, 복귀 15년이라는 시기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천황은 이 시점에서 오키나와를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천황의 측근들에게 오키나와는 천황을 방문시키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지역이었다. 복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미 정착되었고, 사대주의적인 조류도 커지고 있었으나 소수파의 투쟁은 미 군용지 강제 사용에 대한 반대투쟁과 환경파괴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의 지원을 받으며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일본 정부는 무력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규제하려 했다.

1986년 8월, 해방국체의 경비책임자로서 경시청 공안2과장에서 전임해온 스가누마 기요다카 현경 본부장은 전임하자마자 ‘내 임무는 천황폐하를 무사히 마중하고 배웅해드리는 것. 전력을 다해 강한 경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키나와 현경은 오키나와 사회 전체를 엄중한 관리체제 하에 두기 시작했다. 현내 각지에 ‘해방국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지역협력회’가 결성되었는데, 그 사무국은 거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안에 있었다.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에 대한 시비를 논하기 어려운 답답한 사회적 분위기가 오키나와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현 당국은 언론을 총 동원해 ‘빛나는 태양, 커지는 우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국체를 비정치적인 스포츠대회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로써 국체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약 300명의 시민이 발기인이 되어, 1987년 4월 29일(쇼와 천황의 생일)에 ‘천황(제)를 생각하는 공개 시민 연속 강좌’가 시작되었다. 천황과 천황제에 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월 1회, 2년간 천황과 천황제에 관한 강좌를 열어 그 성과를 널리 공유하자는 취지였다.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에 따른 과잉경비 110번’ 등의 단체도 활동을 개시했다.

노조 측에서는, 현노협(오키나와 현 노동조합협의회), 오키나와교조, 고등교조(오키나와 현 고등학교 장애아학교 교직원조합), 자치로, 각지구로로 구성된 ‘국

체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5자 연락협의회'가 9월 11일,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구하고, 국체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총 켈기대회'를 개최했다. 또 고등교조 등 21단체는 시민단체 등의 참가도 얻어 추계국체 개회식 전날인 10월 24일, '천황의 전쟁책임·전후책임을 고발하는 지비치리가마 집회'를 열고, 다음날인 25일에도 오키나와 시에서 집회와 데모를 가졌다.

지비치리가마는 오키나와 섬에 미군이 최초로 상륙한 요미탄촌의 해안 근처에 있는데, 미군 상륙 다음날 이 가마에서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 '자결'로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 지비치리가마 입구에는, 1987년 4월 조각가 긴조 미노루와 그의 근거지인 나미히라의 사람들과 유족의 합작인 '세대를 잇는 평화의 상'이 세워졌다.

오키나와에 대한 천황의 전쟁책임

해방국체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천황제 논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쇼와 천황의 직접·구체적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묻는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는 직접·구체적인 예로 지적되었던 것은, 1945년 2월 고노에 후미마로 전 수상이 천황에 '이제 일본의 패전은 불가피하니 화평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진언한 데 대해, 천황이 '그것은 한 번 더 전과를 올린 다음이 아니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이를 뿌리치고 오키나와전투에 돌입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때의 고노에와 쇼와 천황의 대화는 학술적 자료로서는 일찍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이 오키나와 민중의 인식으로 공유화된 것은 해방국체 무렵이었다.

류큐방송(RBC)TV는 이를 소재로 88년 6월, 위령의 날 특별 프로그램 '너무 늦은 성단'을 제작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45년 2월 시점에서 천황이 고노에의 진언을 받아들여 화평의 결단을 했었다면, 오키나와전투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전후책임을 묻는 직접·구체적 사례로 거론된 것은 1947년 9월의 이른바 천황

메시지이다(7페이지 참조). 이것은 천황자신의 발상이라기보다는 전후 상징천황제의 옹호자인 맥아더 원수의 구상에 천황이 따른 것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천황이 굳이 미군의 오키나와 지배를 지지한다는 의향을 점령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전쟁책임, 전후책임에 대한 추궁 방법은 자칫하면 쇼와 천황의 개인적 책임 추궁에 집중돼 천황제 문제를 외면하거나 천황이 바뀌면서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손을 더럽힌’ 천황 뿐 아니라 히로노미야(현 황태자)와 황태자(현 천황)를 하계국체와 신체장애자 스포츠대회(가리유시 대회)에 파견하는 등 천황가 3대의 오키나와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황태자는 오키나와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며, 류카¹⁶⁾를 읊을 수도 있었다. 히로노미야는 황태자의 추천으로 히메유리 학도대의 생존자인 미야라 루리의 저서 『나의 히메유리 전기』(나라이사)를 읽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과거의 전쟁을 통해 ‘누치두다카라¹⁷⁾(생명이 보물)’이라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평화를 갈망하는 통절한 외침이 국민 모두의 염원이 되도록 절실히 바라고 있다’라는 감상을 밝힌 바 있다(오키나와타임스, 1987년 9월 20일).

그러나 쇼와 천황은 병 때문에 결국 오키나와 땅을 밟을 수 없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와 학교

한편, 해방국체를 둘러싼 또 하나의 문제는 ‘히노마루’, ‘기미가요’ 문제였다.

1985년 9월 5일 문부성은 전국의 공립 초, 중, 고교가 그 해 봄 졸업식과 입학식에 ‘히노마루’ 계양과 ‘기미가요’ 제창 여부에 대해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조사결과를 공표, 동시에 실시율이 낮은 지역을 문제 삼아 각 교육위원회에 대해 ‘국기와 국가의 적절한 취급의 철저’를 요구하는 초등중등 교육국장의 통지(8월 28일자)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16) 琉歌 : 아마미 제도, 오키나와, 미야코 제도, 야에야마 제도에 전승되는 서정단시형 가요. 시와 노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17) ‘命どう宝’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졸업식의 경우 전국평균 ‘히노마루’ 게양률은 초등학교 92.5%, 중학교 91.2%, 고등학교 81.6%, ‘기미가요’ 제창률은 초등학교 72.8%, 중학교 68.0%, 고등학교 53.3%로 나타났으며, 입학식의 경우는 모두 졸업식보다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이다. 졸업식의 ‘히노마루’ 게양률이 초등학교 6.9%, 중학교 6.6%, 고등학교 0%. ‘기미가요’에 이르면 초, 중, 고 모두 0%이다.

이 조사결과를 오키나와에서 바라보면, 전국적으로 이상하리만치 높은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 비율이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약 20년 전에는 ‘히노마루’를 상징으로 하는 오키나와의 복귀 운동에 본토 혁신단체의 활동가(교원 포함)들이 조심스러운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20년 사이에 오키나와와 본토의 위치는 이런 점에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이 문부성통지와 ‘히노마루’, ‘기미가요’ 실시상황 조사결과 발표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오키나와 현 교육위원회(현 교육청)였다.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대해, 오키나와 현 교육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1987년의 해방국체가 결정되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포츠대회와 입학식, 졸업식에 ‘히노마루’ 게양을 끼워 넣도록 지도를 강화했고, 1984년에는 현교육장이 중학교 교장들을 모아 ‘학교행사와 국경일에 히노마루를 게양하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장들을 부추겼다. 중학교 6.6%, 실수로 옮겼을 때 151개교 중 10곳의 ‘히노마루’ 게양은 그 성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때까지의 지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었다.

이 문부성 통지는 형식적으로 보면 특히 오키나와를 노린 것은 아니다. 전국 47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교육위원회에 똑같이 송부된 것이다. 그러나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실시상황으로 본다면, 분명히 오키나와를 주요 타겟의 하나로 삼았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관한 문부성 초등중 교육국장명의 한 통의 통지를 계기로, 오키나와의 보수정당과 교육행정 담당자는 ‘히노마루’ 게양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의회와 시정촌의회에서는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요구하는 결의가 강행되었다. 이들 결의에 대해 현교육장은 85년 11월 18일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현립학교장 앞으로 관할 하의 초·중학교와 소속직원에게 대해 ‘적극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제창하도록’ 강력히 지도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그러나 오키나와 사회전체가 문부성통지에 순순히 따르지는 않았다. 이 통지를 계기로 다시금 자신들의 역사적 체험을 돌이켜보고 ‘히노마루’를 상징으로 하는 복귀운동의 선두에 선 교직원의 책임을 포함해 그 의미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당연히 그 사이에 낀 교장들은 동요했다. 그래서 현 교육청은 이듬해인 86년 1월 10일, 전년의 교육장 통지는 직접 복무감독 하에 있는 현립학교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직무명령이며, 시정촌교육장에 대해서는 지도조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교육청 당국은 교장회 등에서 ‘졸업식이 혼란스러워지면 경찰력을 도입하라’든가, ‘방해한 학생의 졸업인정을 보류하라’는 지도를 했다. 1985년 8월 28일자 통지에 관해 문부성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강제는 아니다’(류큐신보, 1985년 9월 11일)라고 주석을 덧붙이며 시치미를 떼지만, 권력자의 의향을 읽은 사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폭시켜갔던 것이다. 당시, 오키나와전투 중의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몇몇 집단 ‘자결’에 대해 그것이 일본군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권력자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인지는 논의가 있었으나, ‘히노마루’ 문제는 그러한 논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혼란 속의 86년도 졸업식·입학식

결국, 86년 3월 1일에 졸업식을 치른 현립고교 54개교 중 ‘히노마루’를 게양한 것이 43개교(80%), ‘기미가요’ 실시(라고는 해도 테이프를 튕 것이었으나)가 5개교(9%), ‘히노마루’를 게양하지 않거나 도중에 내린 것이 11개교(20%)였다.

현 교육청은 86년 3월 31일 임시교육위원회를 열고, 졸업식 결과에 따라 현립고교 교직원 35명에 대해 정직, 감봉, 계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히노마루’, ‘기

미가요' 반대 등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신설추행위, 직무전념의무위반, 상사의 명령에 대한 위반 등이 적용되었다.

고교 졸업식으로부터 약 보름 후에 치러진 초·중학교 졸업식은 현교육위원회의 직접적 관할 하에 없었다는 점도 작용해 '히노마루' 게양률은 51%, '기미가요' 실시는 3개교에 불과했다.

이에 현교육장은, 현교위의 방침에 비판적 내지는 회의적인 시정촌교위에 대해 '교육장의 지도조언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며, 통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위압적인 소견을 보냈다.

거기에도 현 교육청은 '히노마루'를 게양하지 않은 초·중학교 교장들을, 시정촌립학교 교직원의 복무감독권한을 가지는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각지의 교육사무소(교육청의 산하기관)로 불러내 '전쟁 전의 특별고등경찰을 연상시키는'(어느 퇴직교장의 말) 사정청취를 하는 등 교장들에 대해 음험한 압력을 가했다.

이리하여 같은 해 입학식의 '히노마루' 게양률은 더욱 높아졌다. 현 교육청에 따르면 '히노마루'를 게양한 것은 초등학교 252개교 중 177곳(70.2%), 중학교 156개교 중 116곳(74.4%), 고교 58개교 중 55곳(94.8%), '기미가요'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이었다.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히노마루' 게양은 숫자상으로 전국평균을 뛰어넘은 것이다.

2년도 되지 않아 전국 수준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혼란을 겪은 졸업식으로부터 1년이 지나려 하고 있었다. 87년 2월 현 교육청은 ①학교행사를 저학년 학생에게 맡기지 말 것 ②부모와의 대화에 응하지 말 것 ③학교장은 소속교직원의 복무에 대해 평소에 충분히 지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현립고교장과 시정촌교위에 보내 다짐을 받아두려 했다.

1987년 3월의 졸업식에서는, '히노마루' 게양은 초등학교 254개교 중 242곳(95.3%), 중학교 157개교 중 152곳(97.8%), 고교 56개교 중 53곳(94.6%), '기

미가요' 테이프를 든 것은 초등학교 10개교(3.9%), 중학교 9개교(5.7%), 고등학교 5개교(8.9%)로 나타났다. 초·중학교도 고등학교보다 1년 늦게 '히노마루' 계양틀에서 전국평균을 넘어섰다. 전후 일본이 40년 걸려 조성한 상황을 오키나와의 지역 권력자들은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만들어 보인 것이었다.

고등학교에서 '히노마루'를 계양하지 않은 3곳 중 2곳은, 졸업생이 '히노마루'를 계양한 식당의 입장을 끝까지 거부해 교장이 '히노마루' 계양을 단념한 경우이며, 다른 한 곳은 단상의 '히노마루'를 학생이 없애 계양하지 못한 경우이다. '히노마루'가 없어진 사건의 무대는 요미탄고교였다.

요미탄(謊谷)촌에서 불태워진 '히노마루'

요미탄촌은 해방국체의 소프트볼 경기장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촌은 촌의회 결의와 촌민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없는 국체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0월 들어 국체가 가까워지면서 각 현의 선수들도 속속 요미탄 입성을 시작할 무렵, 히로세 마사루 일본 소프트볼 협회장은 갑자기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없으면 소프트볼 경기장을 타 시정촌, 또는 타 부현으로 옮기겠다고 통보했다.

혼란과 긴장 속에 이루어진 대화 결과, '기미가요'의 제창 없이 '히노마루'를 계양한다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히로세 회장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경기 전날 지비치리가마를 방문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를 밀어붙인 자가 지비치리가마에 온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유족들은 분개했고 그의 현화는 거부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프트볼 경기장인 메인 보울에는 '히노마루'가 휘날렸다. 촌의 슈퍼 경영자 지바나 쇼이치는 '히노마루'를 끌어내려 불태웠다. 그는 촌 소매상업 협동조합 대표, 촌상공회 부회장인 동시에 지비치리가마 평화의상 건립위원회 사무국장, 평화를 위한 요미탄 실행위원회 대표이기도 했다. 그는 요미탄고교 사건 직후부터 '학생들을 전면으로 내세워버린 어른들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히노마루’ 소각사건이 일어나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촌장과 촌직로역원에 대한 협박전화, 촌사무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전화 등으로 사무소는 물론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피난하는 등의 소동이 잇따랐다. 그것은 이윽고, 지바나 쇼이치가 경영하는 슈퍼 방화와 대낮의 습격, 나아가서는 지비치리가마의 ‘세대를 잇는 평화의 상’ 파괴로 급진전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히노마루’ 소각사건을 구실로, 현이 요미탄촌의 사립보육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어이없는 폭거까지 일어났다.

당시로부터 12년 전인 1975년의 ‘히메유리탑’ 화염병 사건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그 때는 실행행위자의 친형제까지 협박받는 등의 일은 없었다. 불과 10년 여 사이에 히스테리컬한 내셔널리즘이 오키나와 사회로까지 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바나 쇼이치와 그의 가게는 ‘히노마루’ 소각 그 자체에는 반드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지역 민중들의 지원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키나와의 역사를 헤쳐온 사람들의 지혜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의 일상이 지역에 밀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제 사용 20년’ 신청이라는 폭거

다음으로, 미 군용지 강제 사용 문제를 보도록 하자.

정부는 미 군용지특조법의 발동에 따라 1982년 5월 15일부터 87년 5월 14일까지 반전지주의 토지에 대한 5년간의 강제 사용 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르게도 84년 11월, 87년 5월 15일 이후의 강제 사용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1985년 8월 5일, 나하 방위시설국장은 오키나와 현 수용위원회에 대해 반전지주의 토지를 1987년 5월 15일 이후 20년 간, 2007년 5월 14일까지 강제 사용하기 위한 재결신청을 했다. 나하 방위시설국은 임의의 임대차 계약이라도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민법 제604조의 규정을 근거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20년 강제 사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었다.

20년 강제 사용의 직접적인 목적은 2가지였다. 첫째는 반전지주의 ‘말살’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5년간의 강제 사용 만으로도 반전지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 때문에 미 군용지특조법 적용에 따른 강제 사용 이후, 계약지주로 돌아선 사람들도 소수이지만 생겨났다. 20년 강제 사용이 실현되면, 반전지주는 기존의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생활인인 반전지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반전지주의 출현을 막는 것이었다. 민법 제604조에 의하면, 임의의 임대차계약이라도 그 존속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992년에는 복귀 시점에서 계약한 사람들의 계약갱신기가 돌아온다. 복귀로 정신이 없을 때 계약해버린 사람들과, 어떤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계약하게 된 사람들 중에는 반전지주를 지원하는 운동과 여론의 고조 정도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반전지주들에 대한 본보기 조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다.

경찰까지 개입한 공개심리

현 수용위원회가 기업자(나하 방위시설국장), 토지소유자(반전지주) 쌍방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제1회 공개심리는 1986년 2월 26일에 열렸다.

회장에는 약 800명이 참석했다. 이는 5년 전의 10배 이상의 숫자였다. 나하 방위시설국은 직원의 대량동원으로 수적으로 지주 측을 위압하려는 전술을 포기했다. 반전지주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공개심리 장소는 마치 기지문제 학습을 위한 거대한 교실을 연상시켰다. 나하 방위시설국은 재결신청이유의 진술 외에는 방어로만 일관했고, 수용위원회는 이듬해 5월의 기한마감을 의식하고 있었다. 수용위원회는 12월 12일, 11회로 공개심리의 중단을 강행하고 이듬해인 87년 2월 14일에 97년 5월 14일까지의 10년간 강제 사용 재결을 내렸다.

재결서의 내용은 대부분이 재결신청이유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가까웠지만 사용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장기간에 걸친 사용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적정보상 면에서 곤란’하다는 이유로 10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년일 경우 적정보상

을 할 수 없는데 10년인 경우에는 왜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이에(伊江)섬의 아하 곤쇼코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일괄과세는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나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991년 4월 중과세 취소소송을 나하시법에 제기했다. 94년 12월 나하시법은 원고전면승리 판결을 내렸으나, 국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96년 10월 후쿠오카 고등법원 나하시부는 원고 전면패소라는 역전판결을 내렸다).

이 공개심리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경찰 권력의 개입이었다.

공개심리 회장 주변에는 기동대가 모여 있었으며, 신문기자라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사복형사가 정체를 들킨 것을 계기로 기동대가 회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12월 12일의 공개심리 종료 시에는 다음 번 공개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은 채 떠나려는 수용위원에 다가선 기보 유키오 위헌공투의장이 사복형사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 문제에 대해 현의회에서 질문한 사회대중당 의원에 대해, 스가누마 현경본부장은 ‘질문 중에 몇 번이나 ‘난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나 있는가’(오키나와타임스, 1986년 12월 16일)라고 몰아붙였다.

이 고압적인 태도는, 질문의 핵심에 있는 사복형사의 의한 폭행상해라는 약점을 감추기 위한 엄포전술이기도 했다(사실, 현의회의 논의는 현경본부장의 이 고압적인 발언으로 쟁점이 옮겨져 폭행상해문제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거기에는 오키나와 사회에 뿌리 깊은 반 권력적분위기(그것은 곧잘 반 야마토적 심정과 연결된다)에 대한 초조함과, ‘무지한 시골 현의회’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교만이 배어있었다.

가테나 기지 ‘인간 떠앗기’로

그런데 반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1987년 1월 17일, 오키나와섬 북부 구니가미(国頭)촌의 미군훈련장 내에 건설되고 있었던 수직이착륙전투기 해리어의 이발착장(해리어 패드)의 건설에 반대하는 촌민이 훈련장내에 진입해 미 해병대와 충돌, 건설공사를 중지시킨 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보수적인 편인 산촌 촌민들의 이런 행동은, 오키나와 현경간부나 나하 방위시설국 등 정부산하기관의 야마토 관료의 질서감각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오키나와는 불가사의한 곳이었으며, 천황이 오키나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로부터 10일 정도가 지난 1월 28일, 이시가키지마 섬 시라호에서 신 이시가키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보강조사에 저항하는 약 150명의 지역주민을 지휘·선동했다는 이유로 무카에자토 기요시 신공항건설 저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케미야기 도시오 변호사가 위력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체포는 해리어 패드 건설반대투쟁 같은 행동에 대한 분별없는 협박이었다.

한편 화제를 20년 강제 사용 반대투쟁으로 돌려, 공개심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투쟁은 위헌공투 같은 단체공투조직과 1평 반전지주회와 같이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시민·주민운동조직이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하나의 투쟁을 이끌어낸 최초의 예였다. CTS반대투쟁에서는 단체공투조직과 주민운동은 분리·대립 경향에 있었으나, 그러한 상황이 실천적 운동 과정에서 겨우 극복된 것이었다.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1987년 6월 21일의 가데나 기지 포위 대행동이 있었다. 호우 속을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가데나 기지에 집결해 주위 17.5km의 가데나 기지를 ‘인간 떠잇기’로 완전히 포위한 이 행동은, 2,3년 전부터 중부 지역의 활동가들(그 대부분은 중부지구로에 소속)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다. 그것을 현노협이 흡수해 발기인을 모으고, 발기인이 대표위원이 되어 실행위원회를 조직해 실시주체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발기인(대표위원)은 나하시장을 비롯한 혁신 시정촌장, 현노협회장 등의 노조대표, 반전지주회, 1평 반전지주회, 인권협회 등 반전, 평화, 민주단체 대표와 개인이었다. ‘6·21 행동’은 전후 40년, 또는 복귀 후 15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일어선 민중들에 의해 실현되었다.

저자 후기

이 책은, 이와나미 신서에서 펴낸 오키나와 현대사(전후사)에 관한 5권 제 책이다. 그 첫 번째는 전후 20년째에 발간한 『오키나와 문제20년』(1965년), 이어서 그 후 5년간의 긴박한 움직임을 쫓은 『오키나와·70년전후』(1970년), 3번째가 앞의 두 저서의 내용을 포함해, 미군정 하 27년의 오키나와의 역사를 새로 정리한 『오키나와 전후사』(1976년). 모두 나카노 요시오와의 공저이다.

미군지배 하의 오키나와의 역사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지배정책과, 평화·인권·자립(자기결정권의 획득)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생생하게 시대의 고비(시기구분)를 형성하고 있어 전체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72년 오키나와 반환 후, 즉 일본이 된 이후의 오키나와현대사의 독자성과 전체성의 파악은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정 하에 있던 47도도부현의 하나가 되어서건 오키나와 현대사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은, 구조적 오키나와차별 위에 성립하는 미-일 안보체제(미-일동맹)와 오키나와민중의 투쟁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1995년 가을 이후의 투쟁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였다. 그러한 실감을 토대로 쓴 것이, 복귀 후 20여 년간의 오키나와의 역사적 행보를 정리한 『오키나와 현대사』(1996년)이다.

그로부터 약 10년. 오키나와 현대사는, 그리고 미-일동맹의 역사는 이른바 미군재편협의를 거쳐 안보재정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떤 양상을 띠고, 민중운동은 그에 어떻게 발맞추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도, 구판인 『오키나와 현대사』는 다시 써야한다고 느꼈다.

이 신판은 구판이후의 역사적 흐름을 덧붙여 썼을 뿐 아니라,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제1장에서 미군 지배 하의 오키나와의 역사를 정리하고, 전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군 지배 하의 27년간의 역사적 행보를 정리하기에는 신서판의 30페이지로는 부족하다. 가능하다면, 『오키나와 전후사』를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 이들 신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써나가고, 발표해온 많은 논문과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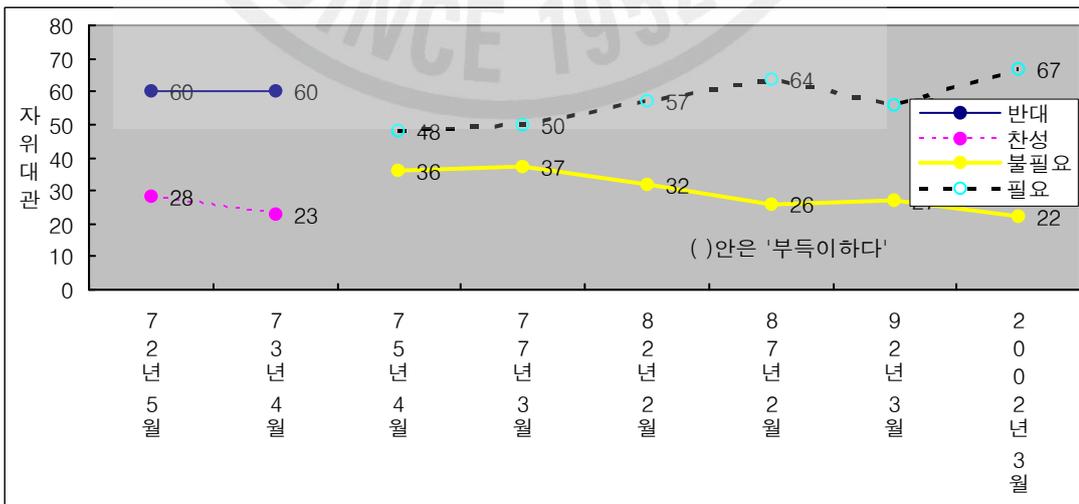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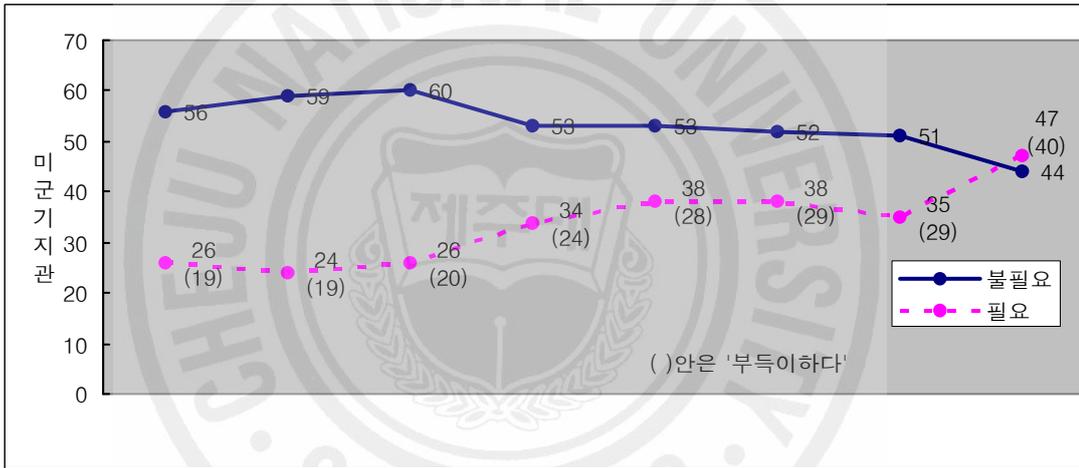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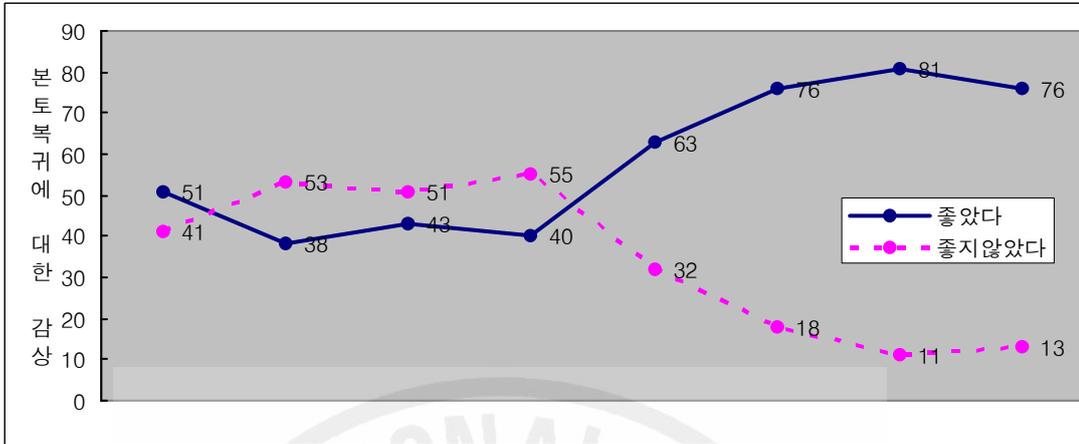
론의 집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이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기에 잡지와 신문에 게재된 문장의 대부분은 『오키나와 동시대사 시리즈(전 10권)』(가이후사)에, 『오키나와 전후사』가 대상으로 한 시기의 것은 같은 시리즈의 별권 『미완의 오키나와투쟁』에 수록되어있다. 신서에 쓰인 사항보다 상세하게,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알고 싶은 시기 등을 참조해 주신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한편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2005년 9월에 실시된 중의원의원 선거는 오키나와에서 보아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참의원에서의 우정개혁법안의 부결을 구실로 중의원 해산을 강행한 이 선거는, 반대파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해 유명 여성후보를 자객으로 내보내는 등 고이즈미 극장이라고도 불리는 드라마같은 정보조작으로 도시지역의 정치적 무관심증을 투표소로 끌어들이므로써 여당이 압승했으나, 오키나와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 선거에서 오키나와의 투표율은 처음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그리고 4개의 선거구 중 1곳에서는 반 자민-공명당 후보가, 다른 한 곳에서는 사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투표율의 저하가 민중의 정치 무관심화를 의미해도, 투표율의 상승이 정치적 관심의 고조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미군 재편협의를 거쳐 일본은 점점 이웃의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고립되어 그들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초강대국 미국에 기대 오키나와를 군사적 대립의 최전선에 두려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이를 용인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것인가. 지금 그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11월
아라사키 모리테루

북귀·미군기지·자위대에 관한 오키나와 민중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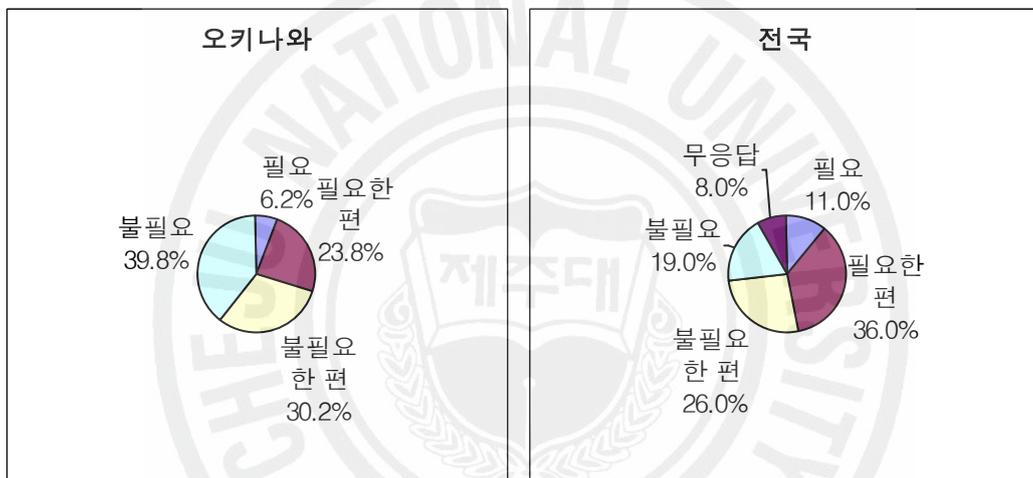
본토인들의 오키나와 이해도에 대한 오키나와 민중의 평가

(%)

	87년 2월	92년 3월	02년 3월
1. 충분히 이해하고있다	4.5	3	3.4
2. 그럭저럭 이해하고있다	40.9	34.4	31.9
3. 별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43.5	45.9	49.2
4.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	4	5.5	8
5. 모르겠다, 무응답	7	11.2	7.5

자료출처 : NHK 「오키나와주민 의식조사」

주오키나와 미군에 관한 오키나와 민중 및 전국의 평가(2005년 6월 조사)



자료출처 : 류큐신보사·마이니치신문사